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AgrifoodFiscalReport

2026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grifood Fiscal Report

CONTENTS

- 005 **논단** 농가소득 안정 정책 방향과 과제
- 015 **재정제도 진단** 금융세제 개편 논의와 농특세의 대응 방향
- 033 **농식품 재정 이슈**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 개선방안
- 057 **2026 농식품 예산 동향**
- 073 **해외 농식품 재정제도 현황** 미국·EU 농업 분야 금융지원 정책 비교
- 097 **경제동향**
- 111 **경제전망**
- 123 **참고** 2026년도 농식품부 사업 부문 분류표

Agrifood Fiscal Report



01

논단

농가소득 안정 정책 방향과 과제

1 **논단**

농가소득 안정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

농가소득은 증가 추세, 농업 소득 비중은 감소 추세

2025년 농가소득은 평균 5,467만 원으로 2024년보다 8.0% 늘었다(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6). 최근 10여 년간 농가소득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그림 1). 이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평균 명목 농가소득은 2013년 3,452만 원에서 2025년 5,467만 원으로 58.3% 늘었다. 그러나 이를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면 같은 기간 평균 농가소득은 2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농가 살림살이가 생각보다 팍팍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줄고 있다. 농업소득 비중은 2013년 29.1%에서 2024년 18.9%까지 낮아졌다가 2025년 21.4%로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비중은 각각 45.5%에서 35.9%, 16.9%에서 36.4%로 높아졌다. 특히 2025년에는 『농가경제조사』 조사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이전소득 비중이 농업·농외소득 비중을 넘어섰다. 그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거칠게 표현하면 ‘농가가 농사만 지어서 먹고살기 어렵고, 다른 경제활동과 보조금으로 삶을 꾸리는 양상’이 한층 강해졌다 하겠다.

[그림 1] 농가소득 추이 및 구성, 2013~2025년

단위: 만 원



주 1) 농가소득(선형 그래프)과 막대그래프 차이는 비경상소득을 뜻함.

2) 2025년 GDP 디플레이터는 잠정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전문 농가와 기타 유형 농가 간 특성 차이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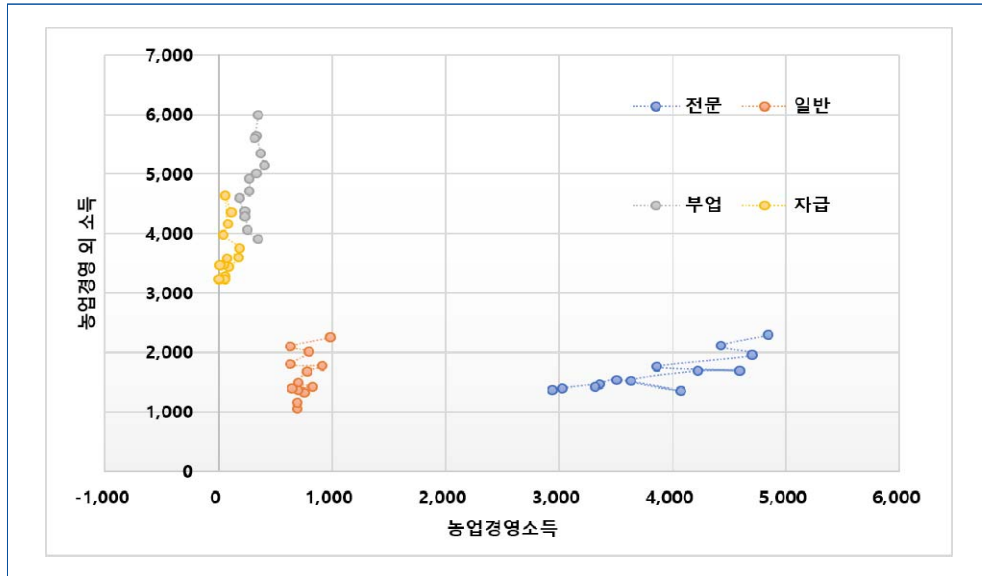
주·부업¹⁾ 농가의 소득 구조를 비교해 보면 전문 농가와 다른 유형 농가의 차이가 뚜렷하다(그림 2). 가로축 ‘농업경영 소득’은 ‘농사를 지어 직간접적으로 얻는 소득’이다. 농가가 얼마나 농사를 중심으로 생계를 꾸리는지를 보여준다. 세로축 ‘농업경영 외 소득’은 농가소득에서 ‘농업경영 소득’을 뺀 금액으로, 농가가 농사 이외 활동으로 얻는 소득 전반의 크기를 가늠케 한다.

1) 『농가경제조사』의 주·부업 농가는 전문 농가, 일반 농가, 부업 농가, 자급 농가로 구분된다(국가데이터처 통계설명 자료서비스, 검색일: 2026.4.27.).

- 전문 농가: 경지 규모가 3ha 이상 또는 농업 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 판매 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 일반 농가: 경지 규모가 3ha 미만이고 농업 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 판매 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 부업 농가: 경지 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 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 판매 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 외 수입이 농업 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 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 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 판매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그림 2] 주·부업 농가의 소득 구조 추이 비교, 2013~2025년

단위: 만 원



주: '농업경영 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 공적 보조금의 합계이고, '농업경영 외 소득'은 농가소득에서 '농업경영 소득'을 뺀 금액임.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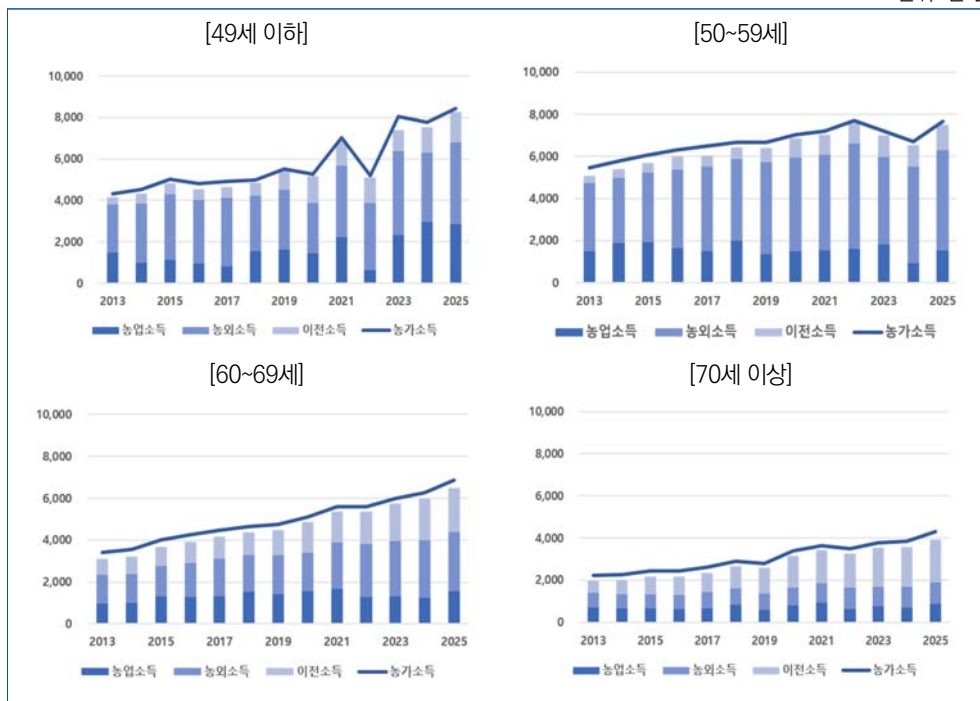
전문 농가는 '농업경영 소득'이 주된 소득원이고(가로축에서 오른쪽 멀리 분포), 그 변동성이 크다. 작황이 좋지 않거나 주 작목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충격 여부에 따라 한 해 살림살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른바 '규모화된 전업농'의 모습을 보여준다. 부업 농가와 자급 농가는 농사를 작게 짓고 농가소득 중 농업 소득 비중도 작다. 한해 농사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농업경영 소득' 편차 작은 편.) 오히려 농업 이외 경제활동이 이들 농가의 소득을 좌우한다. 2종 겸업농가와 특징이 비슷하다. 일반 농가는 일견 '농업경영 소득'과 '농업경영 외 소득'이 균형을 이룬 듯하다. 그러나 일반 농가의 2013~2025년 평균 농가소득은 2,352만 원으로 전문 농가(5,547만 원), 부업 농가(5,192만 원), 자급 농가(3,783만 원)보다 적다. 농사 규모를 늘리기도 어렵고,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여 돈을 벌기도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경영주 연령대에 따라 소득 규모와 구조 변화

경영주 연령대별로도 눈여겨 볼만한 특징이 있다<그림 3>. 첫째, 청장년 경영주(59세 이하) 농가는 농외소득 비중이 가장 높다. 영농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에 도 농업 이외 경제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영주 연령이 70대로 접어들면 농가소득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전소득 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셋째, 경영주 연령이 49세 이하인 농가의 소득 변동성이 큰 편이다. 이는 농업소득은 비교적 이른 연령대에서 최고점에 이른 뒤 60대 이후 급격히 줄고, 농외소득은 50대 후반에 정점에 이르며, 영농 활동이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 기여하기에는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임소영, 2017).

[그림 3] 경영주 연령대별 농가의 소득 구조 추이 비교, 2013~2025년

단위: 만 원



자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농가소득 안정 정책 방향과 과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농가소득을 평균 수준에서 파악할 때와 유형별로 살필 때 차이가 작지 않다. 일률적인 정책 수단으로 소득을 안정시키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 틀 안에서 유형별로 정책 수단을 달리 가져 가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농업 소득 안정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제이고, <그림 2>의 전문 농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한편에는 공익직불제를 위시한 소득 지지 정책과 수입안정보험으로 대표되는 사후 위험 관리 수단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가격 안정제(「양곡관리법」 및 「농산물 가격 및 유통 안정에 관한 법률」) 중심의 가격 지지 정책이 있다. 두 가지 정책 수단을 병행할 수 있는지, 한다면 그 효과성이 어떨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농가 ‘소득’을 지속해서 안정시키고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면 소득지지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둘째, 그림에도 농업 소득을 안정시키더라도 다수 농가(<그림 2>의 일반, 부업, 자급 농가 등)의 소득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농업경영 외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가령 청년 농업인은 초기에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겸업농가’ 형태로 출발하는 방식을 흔히 선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사전 승인한 본인 영농 외 활동”(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2026)을 허용하도록 개정된 점도 이러한 특성과 무관치 않다. 해당 사업은 최대 3년까지 매월 90만~11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 독립 경영 단계에 접어든 청년 농업인은 여전히 소득 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업 직불제의 유기 지속 직불금처럼 (가칭) ‘청년 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독립 경영을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소득 안전망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청년 농업인이 독립 경영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농촌에 살 의지가 있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공공 부문에서 일할 경로를 열어” 주는 방법도 주효할 수 있다(김정섭, 2026).

고령 농업인 대상 소득 안정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25년 경영주 평균 연령이 67.7세이고, 70세 이상이 44.1%에 이를 만큼 고령화는 진행되었다. 1인 가구 비율도 27.1%나 된다(국가데이터처, 2026). 이들은 노동 능력이 약해지고 농외 일 자리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률 등도 낮아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경영 이양 직불제(현재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등을 시행하여 세대교체를 꾀했음에도 그 효과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세대교체 정책에 참여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자신이 가진 농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낀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동 영농 또는 협업 농업 방식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깊게 살펴야 하지만, 고령 농업인이 농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이용권을 이양하면서 배당금이나 임대료 등의 소득을 얻고,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영농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농업법인이나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점진적으로 이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2026),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F1E1%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DT_1EA1501%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검색일: 2026.5.27.

국가데이터처 통계설명자료 서비스(<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da?statsConfmNo=101042&kosisYn=Y>) 검색일: 2026.4.27.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2026.5.22.),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60&act=view&list_no=445199&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0067,0073,0079) 검색일: 2026.5.27.

김정섭(2026), “청년들이 농촌에서 공공의 일을 하게 하자”, 한국농어민신문(2026.5.12.)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56>) 검색일: 2026.5.28.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2026),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임소영(2017), “농가 소득의 연령별·세대별 변화에 관한 연구”, 2017년도 창립 60주년 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Q_301009_002_001%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DT_200Y101%26vw_cd%3DMT_ZTITLE%26orgId%3D3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검색일: 2026.5.27.

2026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Agrifood Fiscal Report

Agrifood Fiscal Report



02

재정제도 진단

금융세제 개편 논의와 농특세의 대응 방향

2 재정제도 진단

금융세제 개편 논의와 농특세의 대응 방향

1. 농특세의 구조와 특징

1.1. 목적세로서의 농특세¹⁾

-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된 목적세임.
 - ▶ 목적세는 특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왔음(Buchanan, 1963; 박기백 외, 2007).
 - ▶ 특히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목적세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지도와 실제 재정 지출 간의 괴리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됨(박기백 외, 2007; 박상원, 2009).
- 반면,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대부분 본세에 부가되는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조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세입과 세출 간 연계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해서 지적되어 왔음(박기백 외, 2007; 박상원 외, 2008; 이영환 외, 2008; 우지훈 외, 2017).
 - ▶ 특히 목적세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① 목적 지출의 범위가 명확하고, ② 세입과 세출 간 연계가 분명하며, ③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음(이영환 외, 2008; 안종석, 2022).

1) 김미복 외(2023),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10-13을 참조하여 정리함.

- 이러한 관점에서 농특세 역시 목적세 제도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 세입과 세출 간 연계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증권거래 관련 세수가 농특세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세입 규모뿐 아니라 목적세로서 농특세가 갖추어야 할 재원 안정성과 세입·세출 연계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원 구조 및 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2. 농특세 세입 구조 및 주요 재원

- 농특세는 소득세·법인세·관세·지방세 등의 감면세액, 개별소비세액,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및 증권거래금액 등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 과세대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본세액 또는 감면세액의 10~30% 수준이 농특세로 부과되며, KOSPI 상장주식의 증권거래금액에는 0.15%의 세율이 적용됨.
- 특히 KOSPI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와 관련된 농특세는 다른 세원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 대부분의 농특세는 본세액 또는 감면세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증권거래 관련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됨.
 - ▶ 이에 따라 KOSPI 상장주식의 양도 시에는 동일한 거래금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농특세가 각각 부과됨.
 - ▶ 2026년 6월 기준,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총 거래세 부담은 증권거래세율(0.05%)과 농특세율(0.15%)의 합인 0.20%임.
 - ▶ 이러한 구조로 인해 증권거래 관련 농특세는 다른 세원에 비해 금융시장 상황과 거래 규모 변화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농특세 세입은 증권거래 관련 세수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구조를 나타냄.

[표 1] 농특세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		세율
소득세, 법인세, 관세, 지방세 감면세액		20%
이자, 배당소득 감면세액		10%
개별소비세액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등	10%
	골프장 입장	30%
증권거래금액(KOSPI 상장주식)		0.15%
취득세액(표준세율 2% 적용)		10%
레저세액(경륜, 경정, 경마에 대한 과세액)		20%
종합부동산세액		20%

자료 1) 김미복 외(2023),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3-2>.

2) 임동원(2021) KERI Brief,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1.3. 농특세 세입 현황 및 주요 특징

- 농특세 세입 규모는 2007~2019년 동안 3~4조 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증권시장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관련 세입 증가의 영향으로 6~9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 특히 2021년에는 8.9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증시 여건 변화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도 7조 원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증권거래 관련 세수는 전체 농특세 세입의 41.7~60.0%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최근에도 전체 농특세의 절반 내외를 구성하고 있음.
 - ▶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과 개인투자자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비중이 각각 57.8%, 60.0%까지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특세 세입 규모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 반면, 2022년 이후 증시 침체와 함께 증권거래 관련 세수가 감소하면서 농특세 세입 규모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음.
- 한편, 최근 증시 호황의 영향으로 2025년 농특세 세입이 처음으로 9조 원을 상회하고, 2026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²⁾³⁾

2) 뉴데일리경제(보도일자: 2026.06.16.), 코스피 활황에 4.9조 복지 청구서 꺼내드나...농어촌 기본소득 전국화 시동.

3) 현재 재정정보공개시스템상 결산 자료는 2024년까지 제공되고 있어, 2025년 이후 수치는 향후 결산 결과를 통해

- 이와 같이 농특세 세입 규모의 증감은 증권거래 관련 세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농특세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2] 농특세 세입 규모 및 증권거래 관련 농특세입 비중

단위: 백만 원, %

연도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 관련 농특세입	비율
2007	3,800,942	1,728,362	45.5
2008	3,560,376	1,635,033	45.9
2009	3,842,039	1,868,252	48.6
2010	3,901,437	2,008,951	51.5
2011	4,894,858	2,515,258	51.4
2012	3,851,346	1,768,564	45.9
2013	2,859,035	1,529,167	53.5
2014	3,332,412	1,458,899	43.8
2015	3,824,900	1,861,340	48.7
2016	3,636,956	1,637,143	45.0
2017	3,838,756	1,774,539	46.2
2018	4,417,545	2,217,369	50.2
2019	3,918,234	1,634,957	41.7

주 1) 농어촌특별세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재정상세통계 중 결산 세입/세출 자료(징수액 기준) 활용함.

2) 증권거래세는 국세통계포털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현황 자료(징수액 기준) 활용함.

자료 1)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 2026.06.16.)

2)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검색일: 2026.06.16.)

1.4. 농특세 세출 구조와 목적세로서의 한계⁴⁾

■ 농특세 세출 변화와 범위 확대

- 농특세는 2026년 프로그램명 기준으로 ① 농가경영안정, ②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 ③ 농산물 품질관리, ④ 농업신산업육성, ⑤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⑥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 ⑦ 식품외식산업 육성으로 이루어져 있음.
 - ▶ 단위사업으로는 ① 농가소득보전(직불), ② 농업정책보험, ③ 농산물 소비 활성화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김미복 외(2023),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34~35, pp. 61~68 참조하여 정리함.

화 및 식생활 개선, ④ 농업경영체 등록, ⑤ 농식품 기술개발, ⑥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⑦ 농업인 교육지원, ⑧ 농촌고용 인력지원, ⑨ 농촌공간 및 정주여건 개선, ⑩ 농촌복지증진, ⑪ 농촌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⑫ 식품 기술개발로, 총 12개 사업임.

- 초기에는 생산기반 조성, 생산유통 개선, 기술개발 및 정보화, 인력육성, 생활환경 개선 등 목적세 취지에 부합하는 5개 분야 중심으로 세출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농업정책보험, 농가소득보전(직불), 귀농·귀촌, 농촌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단위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범위가 크게 다양화됨.

■ 농특세 사업의 독자성·차별성 미흡

- 농특세 사업계정은 일반회계·타 계정·기금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고유한 사업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동일 사업 내에서도 재원 구성이 혼재되어 있어 목적세로서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부족함.
- 2026년 기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 농특세 사업계정과 구조 개선 사업계정 간에도 프로그램 기준으로 5개 사업이 중복되어 있음.
 - ▶ 구조 개선 사업계정과 중복되지 않는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 사업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 또한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사업은 농지관리기금에서도 추진되고 있음.

[표 3] 2026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구조개선 사업계정)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현황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구조개선 사업계정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농가경영안정	• 농가소득보전(직불) • 농업정책보험	농가경영안정	• 농업정책보험 • 재해대책 • 정책금융보험관리 • 농업기계장비
농산물 품질관리	•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품질관리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품질관리 정보화

(계속)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구조개선 사업계정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농업신산업육성	• 농식품 기술개발	농업신산업육성	• 농기자재 산업육성 • 농생명자원 사업육성 • 농업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대응 • 스마트농업육성 • 친환경 농업 인프라구축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농업인교육지원 •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 농식품 창업지원
식품외식산업 육성	• 식품기술개발	식품외식산업 육성	• 농식품 글로벌 진출 확대 • 식품산업 기반조성 • 식품산업 육성 • 한식 및 외식산업 육성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효율화	• 농산물 소비 활성화 및 식생활 개선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 가축방역
농촌복지 및 지역 활성화	• 농촌공간 및 정주여건 개선 • 농촌복지증진 • 농촌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농림축산 검역검사	• 가축검역
-	-	축산업진흥 및 동물복지향상	• 동물보호 및 복지
-	-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 농림행정정보화 • 농식품 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 • 농업농촌 알리기 • 농업정보 환경지원(정보화) • 정책연구개발(R&D)
-	-	양곡관리	• 식량생산 유통지원
-	-	종자관리	• 종자산업육성 • 종자원정보화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 2026.06.17.) 2026년 예산 세출/지출 항목 참조.

■ 농특세 계정에서 타 계정 및 기금 등으로의 높은 전출 비중

- 농특세는 목적세로 도입되었으나, 농특세 사업계정 세출의 상당 부분이 구조개선 사업계정 및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두 항목을 합한 비율은 농특세 사업계정 세출 총액의 80%를 상회함.
 - ▶ 2023~2026년 예산 기준으로 농특세 사업계정에서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의 전출 비율은 43.5% → 46.3% → 37.6% → 48.5%임.

- ▶ 같은 기간 농특세 사업계정에서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 비율은 40.2% → 39.7% → 44.9% → 37.7%임.

[표 4] 농특세 사업계정 중 계정 및 회계기금 간 전출 현황

단위: 십억 원, %

연도	농특세 세출		
	구분	전출금	농특세 세출에서 각 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2023	농특세 사업계정 세출(총액 기준) 계	7,016	-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050	43.5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전출	2,822	40.2
	전출 계	5,872	83.7
2024	농특세 사업계정 세출(총액 기준) 계	7,519	-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478	46.3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전출	2,987	39.7
	전출 계	6,465	86.0
2025	농특세 사업계정 세출(총액 기준) 계	6,647	-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2,502	37.6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전출	2,987	44.9
	전출 계	5,489	82.6
2026	농특세 사업계정 세출(총액 기준) 계	7,822	-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3,793	48.5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전출	2,947	37.7
	전출 계	6,740	86.2

주: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세출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재정상세통계 중 예산 세출/지출 자료(총액 기준) 활용함.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 2026.06.17.).

■ 목적세로서의 세입-세출 연계성 약화

-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지출 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입과 세출 간 대응 관계가 약한 ‘약한 연계형 목적세’로 평가되며,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입·전출 확대 등으로 목적 연계성은 더욱 약화되고 있음(안중석, 2022).
 - ▶ 농특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⁵⁾

5)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 제1조(목적).

- 이에 따라 농특세 재원은 특정 목적을 위한 독립적인 재원이라기보다 일반 재정 지출과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목적세의 특징인 세입·세출 간 연계성과 재정의 칸막이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안중석, 2022).

2. 최근 금융세제 개편 논의 동향과 농특세 관련 쟁점

2.1. 금융세제 개편 논의 경과⁶⁾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2020년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상품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과세체계를 통합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2023년 1월에 추진하기로 하였음.
 - ▶ 금투세는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체계로 도입됨.
 -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함. 그러나 손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함.
 - ▶ 금투세의 과세표준은 손익 통산을 반영한 소득액에서 기본공제 및 이월결손금을 제외하여 결정함.
 - ▶ 세율은 20%를 적용하되 3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함.
 - ▶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은 5천만 원, 그 외 소득 합산액은 250만 원임.
 - ▶ 금투세액은 반기별로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최종세액에 따라 추가납부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구성됨.

6)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2024), pp. 37-38;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020) 참조하여 정리함.

[표 5]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구분	내용
과세 방법	• 분류과세
과세 대상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액 - 기본공제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이월공제 5년 허용)
손익통산	•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의 손익 및 손실 간 상계 허용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 원 • (그 외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 원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신고·납부	• 금융회사가 반기별 원천징수, 납세자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2024), [표 19] 발췌.

■ 증권거래세 선제적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투세 도입 이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 (2021년)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0.10% → 0.08%로 0.02%p 인하하기로 함.
 - ▶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 0.08% → 0.00%로 0.08%p 추가 인하함으로써,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 2024년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되면서 일단락되었음.
 - ▶ 다만 그동안 KOSPI 증권거래세율은 ('20) 0.10% → ('21) 0.08% → '23) 0.05% → ('24) 0.03% → ('25) 0.00%로 인하됨.
 - ▶ 그러나 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 2026년 다시 KOSPI 증권거래세율은 0.05%로 환원됨.
 - ▶ 이러한 증권거래세율 변화 과정에도 KOSPI 증권거래가액에 부과되는 농특세(0.15%)는 변함이 없었음.

2.2. 금융세제 개편 가능성에 따른 농특세 운영방식 검토 필요성

■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증권거래 관련 농특세의 유지

- 지난 2021~2025년 동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KOSPI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되었으며, 현재 세율은 0.05%임.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농특세율(0.15%)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음.
- 따라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자체는 증권거래 관련 농특세의 부과체계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농특세 재원이 당장 위협받는 상황은 아님.

■ 향후 거래세 중심 체계 축소 가능성과 증권거래 관련 농특세의 쟁점

- 농특세 측면의 핵심 쟁점은 장기적으로 거래세 중심 과세체계가 소득세 중심 체계로 전환될 경우, 증권거래에 부과되는 0.15% 농특세를 현행과 같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
- 현재 금투세는 폐지되었으나, 거래세 중심 체계와 양도소득세 중심 체계 간의 조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향후 관련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가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증권거래세율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등을 포괄한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 또한 2026년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금액에 부과되는 거래세의 역진성을 언급하며, 현행 거래세 중심의 과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⁷⁾
- 따라서 금투세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거래 중심의 과세체계에서 양도소득(자본이득) 중심의 과세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7) 뉴시스(2026.04.09.), 이 대통령 “증권거래세-양도세,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 있어”(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9_0003584378, 검색일: 2026.06.16.)

- 주요국의 경우 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기보다는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운영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줌.
 -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한 국가들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이예지, 2024).⁸⁾
 - ▶ 또한 주식 자본이득세를 운영하는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대만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이예지, 2024).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거래세 중심 과세체계가 축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장기적으로 거래세 중심 체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현행 증권거래 관련 농특세의 부과 근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표 6] 금융세제 개편 논의 경과 및 동향

연도	주요 내용	증권거래세와의 관계
2020	• 금투세 도입 발표(2023년 시행 예정)	• 금투세 도입과 함께 KOSPI 증권거래세를 선제적으로 인하 추진 - ('21) 0.10%→0.08% - ('22) 0.08%→0.00% - 농어촌특별세 0.15% 유지
2021	•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 KOSPI 증권거래세율 0.10%→0.08%
2022	• 금투세 시행 시기 2년 유예(2025년 예정)	• 증권거래세 인하 일정 조정
2023	•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 KOSPI 증권거래세율 0.08%→0.05%
2024	•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 KOSPI 증권거래세율 0.05%→0.03%
2025	•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적용 • 금투세 폐지 확정	• KOSPI 증권거래세율 0.03%→0.00%
2026	• 증권거래세율 환원	• KOSPI 증권거래세율 0.00%→0.05%
향후	• 거래세 중심 체계와 자본이득 과세체계 간 조정 논의 지속가능성	•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 존재

자료 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각 연도).

2)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2024).

3) 연합뉴스(2024.11.04.), 혼돈의 금투세...4년간 '시행 발표 → 유예 → 폐지' 수순(<https://www.yna.co.kr/view/AKR20241104065300002>, 검색일: 2026.06.16.).

4) 뉴시스(2026.04.09.), 이 대통령 "증권거래세·양도세,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 있어"(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9_0003584378, 검색일: 2026.06.16.).

8) 이예지(2024),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제325호, 국회입법조사처.

3. 거래세 중심 과세체계 개편 시 농특세 대응 방향

3.1. 증권거래 관련 세제 개편에 대응한 농특세법 개정

- 현행 농특세법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게 농특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더라도 농특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과 같이 증권의 양도가액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는 농업 분야의 재정구조를 유지하면서 제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거래세 축소라는 금융세제 개편 방향과 목적세의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금융소득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증권거래세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개편하지 않는 것은 정책 논리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임동원, 2021).⁹⁾
 - ▶ 또한 2026년 거래세율 환원 이후 증시 활황에 따른 농특세 세입 증가와 관련하여 농업 외 분야에서는 조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¹⁰⁾
- 따라서 거래세 중심 과세체계가 축소되거나 증권거래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증권의 양도가액에 농특세를 계속 부과하는 방안은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나, 정책적 정합성과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3.2. 대체 자원 발굴

- 기존 세원이 조정되는 경우, 농특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9) 임동원(2021),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10) 농민신문(2026.06.01.), 증시 활황이 농업만 배불린다?... “식량안보·농촌 위한 투자”

- 예를 들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사례를 참고할 때, 주민세 일부를 농특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김미복 외, 2023).
 - ▶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현재 세액공제 방식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또 다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농특세를 신규 부과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김미복 외, 2023).
 - ▶ 이러한 방식은 현행 면세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수혜와 부담 간의 괴리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농특세 재원 조달과 수혜 대상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조세 형평성, 수익자 부담 원칙 및 기존 조세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대체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단순히 기존 세원을 다른 세원으로 대체하는 것뿐 아니라, 농특세의 역할과 사업 구조를 함께 재검토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

3.3. 농특세의 역할 재정립과 세출 사업 개편¹¹⁾

■ 국민 편익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

-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목적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농특세 사업은 국민 전체가 편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 이와 함께 현재 농특세 계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일반회계로 수행 가능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농특세는 목적세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사업과 함께 농산물 수급 및 소비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농특세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1) 김미복 외(2023),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133~144 참조하여 정리함.

- ▶ 식량안보 및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편익이 귀속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목적세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 또한 일반 국민(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¹²⁾ 결과,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55.3%), 농촌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43.5%), 농산물 소비 활성화 및 식생활 개선(35.1%) 등이 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조사됨.

■ 목적세 정체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정비

- 다만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사업이나 농산물 수급 및 소비 관련 사업은 농특세 도입 목적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농특세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 목적 규정과 지원 분야를 재정비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 특히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목적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특세의 지원 목적과 대상 사업을 국민 전체의 편익 증진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목적세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적인 재정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와 같이 농특세 사업계정에서 계정 간 또는 회계·기금 간 전출이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통해 농특세 사업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세입·세출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목적세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 관련 세제 개편 논의를 계기로, 농특세의 역할을 일반 농정재원의 보완 수단에서 국민 전체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12) 설문조사는 김미복 외(2023)의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수행과정에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 수는 총 814명임.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2024).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020~2024)
 김미복·임소영·박미선·임준형(2023),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백·박상원·손원익(2007),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상원·박기백(2008),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박상원(2009), “목적세의 도입과 폐지: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이해”, 《재정학연구》 2(2), 한국재정학회.
 안종석(2022),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이영환·이성규(2008),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경제현안분석》 26, 국회예산정책처.
 이예지(2024),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제 논의를 중심으로-”, 《NARS 현안분석》 제325호, 국회입법조사처.
 임동원(2021),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우지훈·양인준(2017), “세법체계 관점에서 목적세의 허용범위 및 정비방안에 관한 小考”, 《조세와 법》 10(1): 105-14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농민신문(2026.06.01.), 증시 활황이 농업만 배불린다?... “식량안보·농촌 위한 투자”
 뉴데일리경제(2026.06.16.), 코스피 활황에 4.9조 복지 청구서 꺼내드나...농어촌 기본소득 전국화 시동
 뉴시스(2026.04.09.), 이 대통령 “증권거래세·양도세,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 있어”
 Buchanan, James M.(1963), The Economics of Earmarked Tax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1(5): 457-469.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 참조
 국세통계포털 홈페이지 참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2026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Agrifood Fiscal Report

Agrifood Fiscal Report



03

농식품 재정 이슈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 개선방안

3 농식품 재정 이슈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 개선방안¹⁾

1. 포괄보조금 제도의 이론적 배경

1.1. 개념과 유형

- 포괄보조금(block grant)은 사용 용도가 광범위하게 정해진 보조금으로,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 범주 안에서 지방정부·수혜기관이 사업의 세부 내용과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함.
 - ▶ 이는 보조금의 용도를 사업 단위까지 세세하게 지정하는 대신 상위의 정책 목적(예: 농촌 정주여건 개선)만을 제시하고, 그 범주 안에서의 구체적 자원 배분 권한을 하위 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임.
 - ▶ 따라서 동일한 재원이더라도 지역의 여건과 선호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에 배분될 수 있음.
- 개별보조(category grant)는 세부 사업단위로 용도가 지정되어 수령기관의 재량이 좁은 반면, 포괄보조는 단위사업 간 재원 이전이 가능하고 지방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됨.
 - ▶ 개별보조에서는 중앙정부가 ‘무엇에 얼마를 쓸지’를 사실상 결정하는 데 비해, 포괄보조에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 총액 얼마를’ 배정하고 구체적 사용은 지방이 결정함.

1)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기본연구과제인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태후 연구위원) 보고서 내용을 정리·보완한 것임.

-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회계상 구분을 넘어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 구조 자체를 규정함. 포괄보조는 재정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충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1.2. 도입 배경과 정책 목적

-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계정에서 출발함.
 - ▶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 4. 22. 시행)을 계기로, 2010년부터 기존 15개 농산어촌 개발 관련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포괄보조 형태로 시행됨.
 - ▶ 이후 2020년 「농촌협약」 제도가 도입되어 시·군 단위의 통합지원 체계가 강화되었고,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농촌 공간계획과의 연계가 한층 제도화됨.
-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 도입의 정책 목적은 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고, ② 단위사업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사업 간 연계·통합을 강화하며, ③ 지자체의 기획·집행 역량과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④ 주민 참여형 상향식(bottom-up) 사업 발굴을 촉진하는 데 있음.
 - ▶ 중앙 주도의 획일적 사업 집행에서 지역 주도의 계획적 자원 배분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현장 적합성과 주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려는 것임.

1.3. 포괄보조금 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

■ 농촌 인구·산업 구조 변화

- 농촌의 인구·산업 구조는 포괄보조 제도의 운영 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최근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 ▶ 농촌 인구는 2010년 약 877만 명에서 2022년 약 942만 명으로 수치상 증가세를 보이나, 동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6%에서 25.0%로 상승하며 고령화가 심화됨.

-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농촌 시·군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지방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0.5 미만)에 진입함.
- ▶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유출은 의료·돌봄·이동 등 필수 생활서비스의 수요가 급증시키는 동시에,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지역 내 인적 역량을 약화시킴. 이는 결국 포괄보조 제도가 원활할 수 있는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촌의 산업·취업구조도 농업 단일 부문에서 농업·6차산업·관광·서비스의 복합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 농촌 거주자 중 농업 종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촌의 산업단지·제조업·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증가함.
 - ▶ 이에 따라 농촌 정책의 수요가 “농업 생산기반 정비”에서 “지역 정주 여건 종합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음.

[표 1] 농촌 정주여건 관련 주요 정책수요 변화

구분	2010년대 이전 정책수요	최근 정책수요
기초생활	도로·상하수도 등 물적 인프라	의료·돌봄·교육 등 생활서비스
경제기반	농업 생산기반 정비	6차산업, 농촌관광, 청년창업
커뮤니티	마을회관·경로당 등 시설	관계인구 형성, 공동체 회복
환경	오·폐수 처리시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거버넌스	관 주도 사업집행	주민·중간지원조직 협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년 시행)의 제정과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을 계기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각됨.
 - ▶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이양 확대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 특히 2022년 출범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매년 약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사업 자율성이 매우 높은 포괄보조 형태로 운영 중임.

- 이러한 재정분권의 흐름은 농업·농촌 포괄보조 제도의 자율계정 비중 확대, 일부 농촌개발 사업의 지방이양 또는 포괄보조 전환, 나아가 부처 간 농촌 관련 사업의 중복·연계 정비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2] 농촌 관련 주요 포괄보조성 자원 비교(개략)

단위: 연 단위 국비 규모(추정)

재원	소관 부처	연간 규모(추정)	주요 대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약 1조 원 내외	농촌 시·군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약 1,000~1,500억 원 내외	어촌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정안전부	연 1조 원 규모	인구감소지역 광역·기초
농촌협약(패키지)	농림축산식품부	협약당 5년간 약 200~300억 원	협약 체결 시·군

주: 위 수치는 공개자료를 종합한 개략적 추정치이며, 회계연도·집계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3)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정책수요의 복합화와 부처 간 연계 필요성

- 최근 농촌의 정책수요는 단일 부처의 사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음.
 - ▶ 예컨대 농촌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국토교통부의 교통 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 청년층의 농촌 유입 및 정착 역시 농식품부의 청년농 육성, 행안부의 청년마을, 중기부의 창업 지원,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 등의 다부처 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농업·농촌 포괄보조는 농식품부 소관 사업 내에서의 수평적 연계에 국한되어 있음.
 - ▶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미흡으로 인해, 시·군 지자체는 동일 공간에 대해 부처별로 별도의 사업 계획을 중복 수립·관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음.
 - ▶ 또한 부처 간 사업의 중복이나 누락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실정임.

2.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사업 현황

2.1. 농식품부 예산 규모

- 국내 농업·농촌 분야의 포괄보조금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되어 왔으며, 농식품부 예산은 2024년 처음 18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이는 농정 재원의 외형적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한정된 재원 내에서 포괄보조의 비중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및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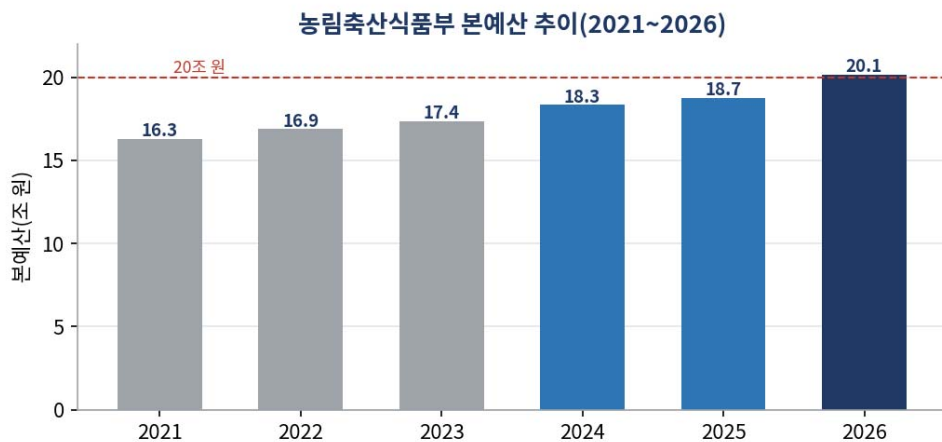
[표 3] 농림축산식품부 본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농식품부 본예산	162,856	168,767	173,574	183,392	187,416	201,362
전년 대비 증감률	-	+3.6	+2.8	+5.6	+2.2	+7.4

주: 2026년 예산은 정부안(20조 350억 원) 대비 1,012억 원 증액된 최종 확정 본예산이며, 농식품부 사상 첫 20조 원 돌파 규모임. 2024년 본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기준 수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 「2026년 농식품부 예산, 총 20조 1,362억원 확정」, 보도자료(2025. 12. 3.) 및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6년 농식품부 본예산은 전년 대비 7.4%(1조 3,946억 원)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637억 원 추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158억 원), 무기질비료 구매가격 보조(156억 원),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30억 원) 등 농촌 정주여건·농가 경영안정 분야의 주요 사업에서 증액이 이루어짐(농림축산식품부, 2025. 12. 3.).
- 최근의 가장 큰 정책 변화로, 2026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舊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하 지특회계)의 포괄보조 비중이 대폭 확대됨.
 - ▶ 정부는 2025년 8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특회계 재원을 전년 대비 약 2.6배 이상 확대하여 2026년 10조 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발표하였고, 최종적으로 2026년 지특회계 본예산이 22.9조 원(2025년 14.7조 원 대비 +55.8%)으로 편성됨(국회예산정책처, 2026).
 - ▶ 2026년에는 지특회계 시·도 자율편성 대상 사업(포괄보조사업)이 종전 47개 세부사업에서 73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120개 사업으로 확대됨(국회예산정책처, 2026).
 - ▶ 이는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국정과제 및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2025. 9. 30)의 재정전략으로서,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2. 주요 포괄보조사업별 사업 개요

-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사업 중 정책적 비중이 큰 6개 사업의 개요(목적·지원 대상·사업 내용·지원 조건)는 다음과 같음.

■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

-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친화형 관광·문화시설, 공공 동물보호·입양센터, 공설 동물장묘시설 등의 조성을 지원함.
 - ▶ 2023년부터 신설된 신규·소규모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시·도 및 시·군·구이며, 국비 분담률은 30~50% 수준임.

■ 농촌형교통모델사업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이 취약한 농촌(군) 지역에 마을버스·수요응답형버스(DRT)·100원 택시 등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이동을 보장하는 사업임.
- ▶ 군이 시행하되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마을자치회·비영리법인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형 버스는 차량 구입·개조비와 운영비(인건비·유지비·정산시스템 등)를, 공공형 택시는 운행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함.
- ▶ 사업비는 국비 50%·지방비 50%(시·도비 10% 권장, 시·군비 40%)로 분담하며, 2024년 기준 81개 군에서 운영됨.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지구·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집적화·규모화와 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부문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임.
- ▶ 지원 대상은 지구 내 생산자단체·농업법인·농협 등 사업대상자이며, 국비 30%·지방비 50%·자부담 20%로 사업대상자별 20억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함(사업 기간 3년 이내).
- ▶ 선정 지구 내 농지는 사후관리 기간(선정 후 10년) 동안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며, 교육·컨설팅 등 소프트웨어(SW) 사업은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집행함.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

- 폐교·폐창고·마을회관 등 농촌의 유허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문화·복지·사회서비스 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임. 사업 물량(개소 수)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변동이 큰 소규모 사업의 특성을 지님.
- ▶ 2023년부터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국비 50%·지방비 50% 매칭 구조로 시·군이 시행함.
- ▶ 지원 대상은 지구 내 생산자단체·농업법인·농협 등 사업대상자이며, 국비 30%·지방비 50%·자부담 20%로 사업대상자별 20억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함(사업기간 3년 이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역량강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창의적마을만들기·시·군 역량강화 등으로 구성되며 국비 분담률은 70%임.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이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신청함.
- ▶ 기초생활거점조성은 면 단위 생활거점을, 농촌중심지활성화는 읍·면 중심지 기능 강화를, 창의적 마을 만들기는 마을 단위 주민 주도 사업을, 시·군 역량강화는 기획·교육·컨설팅과 사후관리를 각각 담당하여 공간 위계별로 역할이 구분됨.

[표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단위사업 구성과 지원 규모

단위사업	주요 내용	지원 단위 및 규모(예시)
기초생활거점 조성	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면 1개소당 1~2년, 수십억 원 수준
농촌중심지 활성화	읍·면 중심지 기능 강화, 정주환경 개선, 경제·사회·문화 거점 조성	읍·면 중심지 1개소당 5년, 70~100억 원 내외
창의적 마을 만들기	주민 주도 마을 단위 사업, 색깔있는 마을 조성	마을 1개소당 수억 원~수십억 원
시·군 역량강화	기획·교육·컨설팅,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후관리	1개소당 연 1~5억 원 수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각 연도); 영양군 보도자료(2025); 전라남도 보도자료(2025)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지원 규모는 연도·지구·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예시값이며, 실제 금액은 공모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 노후 주택·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안전·위생·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집수리·빈집 철거),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이른바 ‘새뜰마을사업’).
-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며 농어촌지역은 농식품부가 담당함.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지방비 30% 매칭)하되 개소당 농어촌 15억 원·도시 30억 원 내 외임.
- ▶ 사업기간은 농어촌 4년·도시 5년이며, 불량도로 점도 주택·30년 이상 노후주택·기초생활수급 가구 비율 등 낙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신청 자격이 부여됨.

2.3. 포괄보조사업별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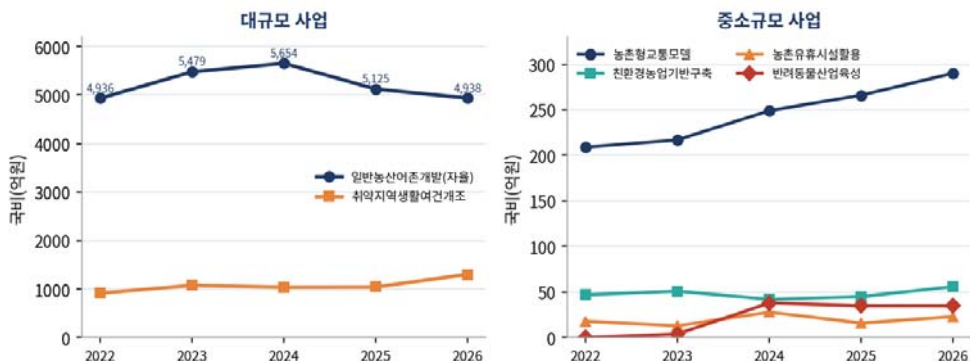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주요 포괄보조사업의 예산 규모와 증감 추세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사업별 국비 예산 추이는 다음과 같음.
 - ▶ 전체 포괄보조재원의 상당수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자율)과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예산 규모가 5개년 평균 5천억 원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1천억 대 이상 규모를 유지하고 하고 있음. 반면, 나머지 4개 사업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규모에 그치며 대규모 사업과의 예산 규모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

[표 5] 포괄보조사업별 국비 예산 추이(2022~2026)

단위: 억 원(국비)

사업명	2022 결산	2023 본예산	2024 본예산	2025 확정	2026 확정	증감률 (25→26)
반려동물산업육성	-	4.0	38.1	35.1	34.5	-1.6
농촌형교통모델	209.3	216.6	249.2	266.0	289.9	+9.0
친환경농업기반구축	47.1	50.7	42.4	44.9	56.4	+25.7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18.0	13.0	27.7	15.6	22.7	+46.0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4,936.4	5,479.2	5,653.5	5,125.1	4,937.5	-3.7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915.0	1,080.0	1,041.2	1,045.0	1,303.8	+24.8
[참고] 일반농산어촌개발 (프로그램)	-	-	6,016.6	6,170.1	6,241.3	+1.2

주: 2022년 결산, 2023·2024년 본예산, 2025·2026년 확정치임.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은 지역자율계정 단위사업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예산 및 2025·2026년 회계 별책 사업설명자료.



-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은 최근 5년간 예산 규모가 2022년 209.3억 원에서 2026년 289.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6년에도 전년 대비 9.0%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정책적 일관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음.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예산 규모가 40억~50억 원대에 정체되다 2026년 전년 대비 25.7% 급증한 56.4억 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역시 다소 둔화세를 보이다 2026년 24.8% 크게 증액된 1,303.8억 원이 배정되며 농촌 취약지역 투자가 대폭 강화되었음.
-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은 연도별 예산 변동폭이 가장 불규칙하여 2026년에 다시 46.0% 급증한 22.7억 원을 기록한 반면, 반려동물산업육성사업은 2023년 신설 후 큰 폭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으로 감소하며 2026년에 34.5억 원을 기록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자율계정 단위사업)은 2024년 5,653.5억 원을 정점으로 2026년 4,937.5억 원까지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등을 모두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프로그램) 전체 규모는 2024년 6,016.6억 원에서 2026년 6,241.3억 원으로 3.73% 증가하였음.
 - ▶ 이는 지자체 자율편성 항목(자율계정)의 예산은 일부 감축되었으나, 국가 기획성 프로그램이나 특정 목적형 사업(취약지역 개조 등)의 예산이 더 큰 폭으로 증액되면서 자율계정의 감소분을 보전·상쇄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2.4. 농촌협약 제도

- 농촌협약(Rural Agreement)은 농촌공간 재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로써,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5년 단위로 농촌계획을 협약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관련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임.
 - ▶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농촌 공간계획·정비계획과 연계됨.
 - ▶ 시·군이 농촌공간 진단을 바탕으로 5년간의 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 정도에 따라 재원이 지원되는 구조임.
- 농촌협약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9개 시·군에서 시작된 이후 매년 약 20개 시·군과 신규 협약이 체결되어, 2025년 기준 누적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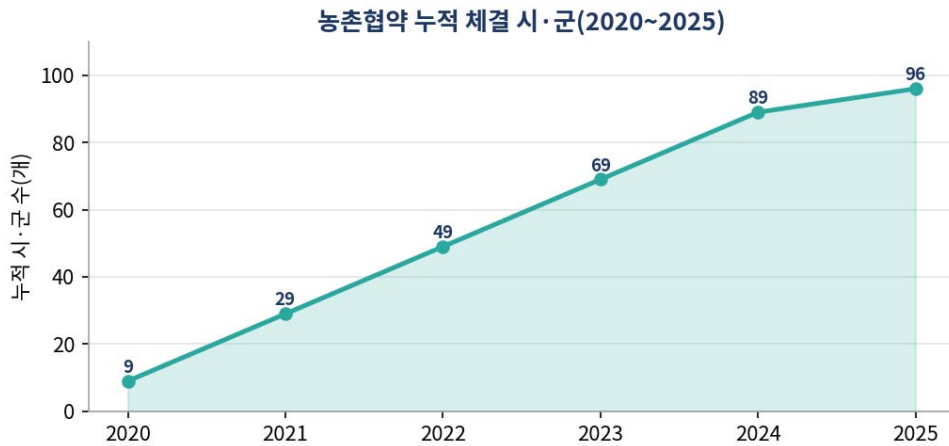
[표 6] 농촌협약 연도별 체결 시·군 수(누적)

단위: 개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당해 연도 신규 협약 시·군	9	약 20	17(+예비 3)	약 20	약 20	18
누적 협약 시·군	9	약 29	약 49	약 69	약 89	96

주: 연도별 신규 협약 시·군 수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일부 연도는 보도자료 기준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 「2022년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2025. 5. 23.); 경상북도 보도자료(2025)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시·군당 농촌협약 규모는 협약 시점·시·군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년간 국비 약 200~300억 원 수준의 패키지가 지원됨.
 - ▶ 2022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에 대해 농식품부는 5년간 시·군당 국비 최대 3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발표함(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 ▶ 경북도 사례(2020~2025년 누적 20개 시·군 협약 체결)에서는 사업비 총 7,327억 원(국비 4,903억 원)이 확보되어, 시·군당 평균 총사업비 약 366억 원, 국비 약 245억 원 수준임.

[표 7] 농촌협약 시·군당 사업비 예시(경상북도, 2025년 선정)

단위: 억 원

시·군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상주시·문경시 합계	837	506	331
1개 시 평균	418.5	253.0	165.5

주: 농촌협약 단일사업 예산이 아니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관련사업이 패키지로 5년간 투입되는 누적 사업비를 의미함.

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2025. 6.), 「경북도, 2025년 농촌협약 2개 시군 선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포괄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문제점

3.1. 성과평가

- 김태후 외(2024)는 농업·농촌 포괄보조사업의 성과를 ① 예산 집행 실태(집행률·실집행률), ② 이중차분(DiD)을 활용한 사업 효과 실증분석, ③ 농식품부·지자체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의 세 측면에서 다각도로 평가하였음.

■ 재정 집행 실태

- 예산 집행 현황은 성과평가의 시발점으로, 집행률 및 실집행률 분석은 사업의 실제 진척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임.
- 세부 사업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산업육성, 농촌형교통모델, 농촌유희시설활용,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의 경우 최근 100%에 근접하며 회계상 안정적인 집행 실적을 달성함.
 - ▶ 반면 친환경농업기반구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은 하락 추세이며, 특히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일반농산어촌개발은 2020년 100%에서 2023년 84.5%로 크게 감소함. (단, 2014·2015·2022년의 하락은 지특·균특회계의 세부 부족에 따른 이월 발생 등 일시적인 제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

[표 8] 세부사업별 집행률

단위: %

연도	반려동물 산업육성	농촌형 교통모델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농촌유희시설 활용지역활성화	일반농산 어촌개발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
2014	-	-	100.0	-	66.0	-
2015	-	-	100.0	-	69.0	76.4
2016	-	-	93.9	-	88.3	89.2
2017	-	-	99.9	-	83.0	82.9
2018	-	98.1	99.4	-	83.3	95.1
2019	-	100.0	100.0	100.0	91.5	99.4
2020	-	95.3	98.0	100.0	100.0	100.0
2021	-	100.0	94.2	100.0	95.4	100.0
2022	-	100.0	94.1	100.0	82.1	99.7
2023	100.0	100.0	91.4	100.0	84.5	100.0

주: 집행률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이월·불용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 실적(실집행률)은 모든 사업에서 회계상 집행률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 ▶ 특히 일반농산어촌개발(53.9%)과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49.6%)의 실집행률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세부 내역사업 중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저조가 두드러짐(농촌형교통모델의 경우 2019년 실집행률이 29.0%로 한때 최저치를 기록함).

[표 9] 세부사업별 실집행률

단위: %

연도	반려동물 산업육성	농촌형 교통모델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농촌유희시설 활용지역활성화	일반농산 어촌개발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
2014	-	-	63.1	-	77.7	-
2015	-	-	49.8	-	79.2	45.0
2016	-	-	43.8	-	83.4	58.9
2017	-	-	78.7	-	78.3	64.3
2018	-	85.1	53.0	-	79.9	64.3
2019	-	29.0	87.1	100.0	92.9	35.7
2020	-	69.2	89.2	58.7	106.0	62.7
2021	-	79.1	81.4	56.4	92.9	50.8
2022	-	90.5	38.5	83.2	58.3	64.3
2023	82.0	90.0	79.6	54.1	53.9	49.6

주: 실집행률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내역사업별 상세는 <부록> 참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집행률과 실집행률 간의 광범위한 격차는 회계상으로는 집행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된 재원이 상당함을 시사함.
 - ▶ 이는 농촌 개발 및 인프라 사업이 계획기간 후반부에 지출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를 적시에 달성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사업 효과 실증분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실제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이질적 이중차분(Heterogeneous 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적용한 처치효과 추정이 수행되었음.

- ▶ 재정 집행률이 투입 측면의 지표라면, 사업의 실제 효과 실증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인과관계 분석이 필수적임.
- ▶ 이에 따라 사업 참여 읍·면(처치집단)과 미참여 읍·면(비교집단)을 구분하고, 사업이 시기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도입된 점(Staggered Adoption)을 반영하여 참여 코호트·연도·준공시점별 평균처치효과(ATET)를 추정하였음.
- ▶ 분석 성과지표는 ① 전체 인구변화율, ② 청장년층 인구변화율, ③ 주택 수 변화율 등 3개 축으로 구성됨.
- 이중차분 추정 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3개 성과지표 모두에서 유의수준 10% 기준 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도출함.
 - ▶ 사업에 참여한 읍·면은 미참여 지역에 비해 전체 인구 유지, 청장년층 인구 유입, 주택 공급 확충 측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우위를 보여, 정주여건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표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이중차분(DiD) 추정 결과 요약

성과지표	처치효과(참여 vs 미참여)	통계적 유의성
전체 인구변화율	긍정적(+)	유의수준 10%에서 유의
청장년층 인구변화율	긍정적(+)	유의수준 10%에서 유의
주택 수 변화율	긍정적(+)	유의수준 10%에서 유의

주: 이질적 이중차분으로 추정된 처치집단 평균처치효과(ATET)의 방향 및 유의성 요약임. 단, 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은 코호트 및 연도별로 상이하하며 유의하지 않은 연도도 존재함[상세 결과는 김태후 외(2024) 참조].

- 추정된 처치효과 크기와 유의성은 코호트·연도별로 상이하며, 효과의 비일관성과 외적 타당성의 불확실성이 한계로 지적됨.
 - ▶ 분석 모형상의 내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연도가 다수 존재하여 효과가 전 기간에 걸쳐 일관되지는 않음.
 - ▶ 특히 국가 전체의 인구 총량이 고정(감소)된 상황에서 본 사업을 전국 모든 읍·면에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순증 효과가 아닌 지역 간 인구의 단순 ‘재배분(제로섬 이동)’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실증 결과를 근거로 한 무조건적인 사업 확대 주장은 지양해야 함.
-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효과의 비일관성은 앞선 재정 사업의 실패 실행률 저조 현상과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음.

- ▶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계획기간 후반부에 지출이 몰리는 비효율적 재정 집행 구조에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유동성 등 하류(Downstream) 효과 역시 안정적으로 발현되기 어려움.
- ▶ 결과적으로 현장의 예산 집행 실태와 계량 실증분석 결과는 상호 간의 인과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신호로 해석됨.

■ 설문조사

- 정량적 분석(재정 집행률 및 DiD 효과성 분석)을 제도·행정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함.
 - ▶ 포괄보조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장 체감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① 지자체 자율성, ② 재원 배분 및 보조율, ③ 협력 및 갈등 구조, ④ 성과 및 역량 형성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설계됨.
- 설문 응답자의 상당수는 포괄보조사업 도입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실질적 기획·집행 자율성이 크게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 사업 계획 수립, 예산 집행, 사후 평가 등 추진 전 단계에 걸쳐 가동되는 정부의 포괄적인 사전승인 절차와 행정적 통제 기제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핵심 원인으로 언급함.
- 중앙정부(기획재정부)의 현행 재원 배분 방식 및 국고보조율 산정 기준이 지방재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 기획재정부의 현행 재원 배분 원칙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제도적 동의 지표는 낮게 나타났으며, 현행 국고보조율 구조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자립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주를 이룸.
-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반면, 타 농정 예산과의 연계 및 조정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 사업 기획부터 준공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실패에 따른 갈등이 상시 발생하여 행정적 기회비용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음. 반면, 본 포괄보조사업의 편성이 타 농식품 분야 예산의 추가 재원 확보나 연계 편성으로 이어지는 상호 긍정적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포괄보조사업을 통한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성과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준공 후 자립적 운영의 지속성 결여가 주요 한계로 드러남.
 - ▶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 후생 증진 및 내재적 역량 형성, 담당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함.
 - ▶ 특히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종료된 이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동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 운영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됨.
- 설문조사 결과는 앞선 재정 실집행률의 저조 현상 및 DiD 계량 실증 분석의 비일관성을 현장의 행정적 언어로 직접 뒷받침하고 있음.
 - ▶ 설문에서 도출된 중앙 통제에 따른 자율성 제약 및 행정 지연 인식은 정량적 데이터로 나타난 낮은 실집행률의 원인을 제도적 차원에서 입증함.
 - ▶ 또한 주민 후생 및 자립 역량 강화 미흡이라는 현장의 진단은 DiD 분석 결과에서 처치효과의 크기가 연도별·코호트별로 불규칙하게 발현될 수밖에 없었던 인과적 근거를 현장 밀착형 증거로 보강해줌.

3.2. 문제점

- 재정 집행 실패, DiD 효과성 실증분석, 담당자 인식 조사의 세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이는 결국 포괄보조사업의 성과 전달체계 왜곡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인과관계로 수렴됨.
 - ▶ (재정 집행) 예산은 정상적으로 배정 및 소진되는 것처럼 보이나, 과도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현장의 실제 집행(실집행률)은 장기간 정체되어 있음.
 - ▶ (사업 효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에 미치는 실질적 처치효과가 전 기간에 걸쳐 안정적이지 못하고, 부분적·비일관적으로만 발현되는 한계를 보임.
 - ▶ (행정 인식) 이러한 성과 부진의 배경에는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 이해관계자 간 협력·소통 미흡, 준공 후 사후 운영 역량 취약이라는 현장의 구조적 요인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
 - ▶ 현행 농업·농촌 포괄보조제도는 재정 배분의 외형적 구조는 갖추었으나, 자율적

기획 - 적시 집행 - 지속 운영으로 이어지는 성과 사슬이 단절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온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증분석 및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포괄보조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 첫째, 중앙정부의 과도한 사전승인 및 통제 기제로 인해 포괄보조금 제도의 핵심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자율성이 원천적으로 제약됨.

- 사업 내용의 미시적 수정·변경 시에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하는 등 감독권 행사가 비대하여 외형적 포괄보조, 실질적 개별보조의 파행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 지연을 유발하여 현장의 실행행위를 저하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

- ▶ 둘째,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정기 순환보직 관행 및 농촌 정책 전담 조직의 부재로 인해 사업 기획·집행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함.

- 농촌 정책 전담 조직의 부재와 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장기적 시계가 요구되는 정주여건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행정 역량의 내재적 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 셋째, 다자간 이해관계자 간의 공식적 협의·조정 채널 미비로 계획 및 집행 전 단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상시화되고 있음.

- 중앙-지자체 간, 지자체-지역주민 간의 정보 비대칭성과 조정 기제 부재는 갈등 관리에 과도한 행정적 기회비용을 소모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사업 성과 지연 및 주민 후생 감소라는 귀결됨.

- ▶ 넷째, 현행 성과 평가 체계가 단순 예산 소진율 등 투입·산출 지표에 편중되어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최종 성과(Outcome)를 포착하지 못함.

- 시·군 자치단체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성과 지표가 없으며, 평가 결과가 차년도 재원 배분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 다섯째, 민간 부문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수준이 낮아, 하드웨어 준공 이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자립적 운영 여력이 취약함.

- 현장 밀착형 중간 지원조직의 활성화 수준이 낮아, 시설물 준공 이후 이를 운용

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자립적 운영 여력이 취약하여 시설 유희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야기함.

- ▶ 여섯째, 현행 포괄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산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재정 여건과 재정력 격차를 반영하지 못함.
 - 지자체의 재정력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국고보조율 적용으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취약 지자체에 과도한 매칭 지방비 부담을 지우며, 이는 낙후 지역의 사업 참여 유인을 위축시키는 역선택을 유발함.
- ▶ 일곱째, 일부 포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본질적 성격과 맞지 않는 회계 계정 및 사업 체계에 분류되어 제도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기초 지자체 단위의 주민 밀착형 교통 서비스인 농촌형교통모델 등이 광역 단위(시·도) 계정에 편성됨에 따라, 실제 집행 주체와 예산 구조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4. 개선 방향과 과제

- 농업·농촌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선은 자율성 확대, 역량 강화, 평가 정비, 부처 연계, 데이터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 제도화의 6대 영역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 각 영역의 개선 과제는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운영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제도·법령 개편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함이 바람직함.

■ 단위사업 통합과 실질적 자율성 확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단위사업 간 칸막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형식적 포괄보조 체계를 실질적 포괄보조 구조로 전환함.
- ▶ 자율성 확대를 위해 단기적 운영 개선과 중장기적 제도 개편을 단계별로 추진함. (단기) 시·군 자치단체가 단위사업 간 재원을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예산의 일정 비율(20~30%)로 명문화하여 연중 여건 변화에 사전승인 없이 신속 대응하도록 조치함. (중기) 농촌협약 체결 시·군을 대상으로 4개 단위사업의 구분을 전면 폐지·통합하여 단일 포괄보조 한도 내에서 사업을 자율 편성하도록

록 제도화함.

- 시·군이 수립하는 시·군 계획서를 보조금 집행의 기본 단위로 삼고, 기존 단위사업 분류는 사후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운영체계 개편을 검토함.
- ▶ 집행의 단위를 단위사업이 아닌 시·군 계획 자체로 구조화함으로써, 주(州) 계획을 보조금 집행 기본 단위로 삼는 미국 특수작물 포괄보조제도와 유사한 실질적 포괄보조 체계를 정립함.

■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포괄보조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질적 저하 및 지역 간 격차 심화)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의 기획·집행·평가 역량 강화 사업을 필수 병행함.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 시·군 역량강화 단위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농촌협약지원센터 등 권역별 중간지원조직이 사업계획 수립, 모니터링, 성과평가, 우수사례 확산을 종합 수행하도록 구조화함.
- ▶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축적과 조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단년도 위탁 방식을 지양하고 5년 단위 다년도 협약 방식'의 원 지원 제도를 도입함.
- 시·군의 농촌 정책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조직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함.
- ▶ 현재 시·군 역량강화 단위사업은 교육·컨설팅·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1개소당 연 1~5억 원 수준으로 그 규모가 제한적임.
- ▶ 권역별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군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 모니터링, 성과 평가, 우수사례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 권역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안정성을 위해 5년 단위 다년도 협약 방식의 재원 지원 체계를 도입함.

■ 결과·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정비

- 지자체의 확정된 자율성에 대한 사후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원 집행의 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후 평가 체계를 ‘결과·성과 중심’으로 전면 재구성함.

- ▶ 기존의 예산 집행률, 시설 완공률 등 투입·산출(Input·Output) 위주의 평가 지표를 탈피함. 대신 농촌중심지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도, 청년 정착률 변화 등 결과(Outcome) 지표와 정주민족도, 인구 사회적 감소율 변화 등 최종 성과(Impact)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전환함.
- ▶ 지자체의 평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행정자료 및 기존 통계와 연계하여 지표를 자동 산출하는 표준 조사·통계 체계를 선행 구축함.
- 시·군 간 상호 비교 가능한 성과지표 패넌을 구축하고, 사후 평가 결과를 차기 협약 및 보조금 한도 배분에 반영하는 환류 메커니즘을 명문화함.
- ▶ 미국 특수작물 포괄보조 체계에서 주(州) 계획 이행 결과를 USDA가 종합 검토하여 차기 계획 배정 및 수립에 활용하는 방식을 준용함.
- ▶ 평가 결과와 자원 배분의 고리를 제도적으로 연결하여 시·군의 성과 제고 유인을 강화하고, 단순 이행 점검을 넘어 우수사례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격상함.

■ 농촌협약 제도의 고도화

- 농촌협약 제도가 시범 도입 및 확산 단계(2020~2024년)를 거쳐 2025년 기준 누적 96개 시·군에 도달함에 따라, 제도의 초점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고도화를 추진함.
 - ▶ 협약 체결 역량 격차가 지역 간 자원 격차로 고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체결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단계 진단 및 계획 수립 컨설팅을 집중 지원함.
 - ▶ 또한 체결·미체결 시·군 간 자원 배분 원칙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사업기회 축소에 따른 현장 불만을 완화함.
- 농촌 생활서비스 권역의 광역화 추세를 반영하여 농촌협약의 공간 단위를 확장하고 장기 협약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유연성을 부여함.
 - ▶ 단일 시·군 경계를 초과하는 중심지-배후지 관계를 고려하여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통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권(광역) 단위 협약 제도를 신설함.

- ▶ 아울러 5년의 협약 기간 중 인구 구조, 지역 산업, 재해 등 거시 여건이 급변할 경우 협약 내용을 일부 수정·조정할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시·군에 법적으로 부여함.

■ 부처 간 연계 강화

- 농촌 지역 수요의 복합화에 대응하고 지자체의 다중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다부처 통합 계획 체계를 모색함.
 -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협약 계획 간의 정합성을 연계함.
 - ▶ 현재 시·군 단위에서 개별 수립·운영되는 농촌협약 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등을 시·군 단위의 ‘농촌 통합 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농식품부·행안부·국토부·복지부가 동 계획을 공동 승인·활용하는 부처 연계 표준안을 검토함.
- 부처 간 농촌 관련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 및 유기적 연계를 위해 상설 조정기구를 가동하는 이중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함.
 - ▶ 국무총리실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강화하여 관계 부처의 농촌 분야 사업을 매년 심의·조정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함.
 - ▶ 이와 동시에 시·군 일선 현장 단위에서도 ‘농촌 통합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도록 하여,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처 사업 간 중복 및 사각지대를 상시 조정하도록 유도함.

■ 협의·참여 제도화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

- 상향식 정책 정당성과 객관적 통계 근거를 동시 확보하기 위해 법정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농촌 공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
 - ▶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에도 ① 농업인 단체, ② 주민자치회, ③ 사회적경제·시민사회 조직, ④ 농촌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필수 표준 절차로 의무화함.
 - ▶ 협의 결과를 계획서 내에 명시 반영하도록 하고, 협약 평가 지표에 절차적 충실성을 포함하여 상향식 정당성을 사후 검증함.

- 포괄보조의 계획-집행-평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뒷받침할 국가 단위의 농촌 정주여건 통합지표 체계를 구축·공표함.
 - ▶ 주거, 의료, 교육, 교통, 일자리, 문화, 안전 등 영역별 표준지표로 구성된 통합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 계획 수립의 객관적 벤치마크 근거로 제공함.
 - ▶ 이와 연계하여 행정 담당자, 중간지원조직, 지역 주민이 동시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시·군 농촌공간 데이터 플랫폼을 다부처 공통 기반 인프라로 구축하여 사후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함.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확대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김태후 외(2024),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부처 합동(2025.09.30.),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농림축산식품부(2025),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지방시대위원회(2023),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행정안전부(202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경상북도(2025.05.12.), 경북도, 2025년 농촌협약 2개시군 선정, 전체 시군 농촌공간개발
 농림축산식품부(2022.06.17.), 2022년 농촌협약 대상 20개 시·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2025.05.23.), 5월 22일자 목포MBC "농림부가 서두른 이유···타 부처에 예산 뺏길까봐" 등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5.12.03.), 2026년 농식품부 예산, 총 20조 1,362억원 확정
 영양군(2025.09.26.), 영양군,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공모 선정
 전라남도(2025.06.15.), 전남도,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공간정비사업 8개 지구 선정
 해양수산부(2025.06.04.), 202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대상지 10개 어촌마을 선정

Agrifood Fiscal Report



04

2026 농식품 예산 현황

4 2026 농식품 예산 현황

1. 농식품부 2026년 총예산

- 2026년도 국가 전체 예산 총지출 규모는 727.9조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673.3조 원) 대비 54.6조 원(8.1%) 증가함.
- 정부 총지출의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규모는 보건·복지·고용(269.1조 원), 일반·지방행정(121.4조 원), 교육(99.9조 원), 국방(65.9조 원)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전년(25.9조 원) 대비 2.1조 원 증가(8.1%↑)한 28.0조 원이 편성되어 정부 총지출 평균 증가율(8.1%)에 준하는 수준을 확보함.
- 보건·복지·고용 부문이 전년 대비 20.4조 원 증가(8.2%↑)하여 절대적인 소요 증가 폭이 가장 컸던 반면, R&D 분야는 전년 대비 19.9%(+5.9조 원) 증가하여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 기초를 반영하였고, 외교·통일 분야는 0.7조 원 감소(△9.1%)하여 유일하게 감소 조정을 기록함.

[표 1]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 원, %

구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부 총지출	673.3	727.9	54.6	8.1
1. 보건·복지·고용	248.7	269.1	20.4	8.2
2. 교육	98.5	99.9	1.4	1.4
3. 문화·체육·관광	8.8	9.6	0.8	9.1
4. 환경	13.0	13.9	0.9	6.9
5. R&D	29.6	35.5	5.9	19.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1.8	3.6	12.8
7. SOC	25.4	27.7	2.3	9.1
8. 농림·수산·식품	25.9	28.0	2.1	8.1
9. 국방	61.2	65.9	4.7	7.7
10. 외교·통일	7.7	7.0	△0.7	△9.1
11. 공공질서·안전	25.0	27.3	2.3	9.2
12. 일반·지방행정	110.7	121.4	10.7	9.7

주 1) 보건·복지·고용, 교육의 경우 유보통합에 따라 '24년 보육사업 예산을 복지 분야에서 교육 분야로 이관한 후의 규모임.
 2) 과학기술 분야 외에도 일부 분야의 R&D 예산이 중복 계상되며, 국방전력 증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특별회계 및 병무청 관련 예산은 총지출에서 제외됨. 이로 인해 12대 분야별 세출 예산의 합계는 총지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6 나라살림 예산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18.7조 원) 대비 7.4% 증가한 20.1조 원(201,362억 원)으로 집계됨.
- ▶ 최근 5개년(2022~2026년)간 국가 전체 총지출 및 농식품부 총예산의 연평균 증감률은 각각 4.6%, 4.5%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유사한 증가 추세를 나타냄.
- ▶ 이에 따라 국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총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8%, 2023년 2.7%를 기록한 이후, 2024년부터 2026년 예산안까지 2.8% 수준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음.

[표 2] 농식품부 및 농식품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연도	국가전체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식품부	
	예산액	전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전년 대비 증감률	예산액	전년 대비 증감률
2022	6,077,000	8.9	236,823	4.5	168,767	3.6
2023	6,387,000	5.1	243,775	2.9	173,574	2.8
2024	6,566,000	2.8	254,285	4.3	183,392	5.7
2025	6,733,000	2.5	258,878	1.8	187,416	2.2
2026	7,279,000	8.1	280,315	8.3	201,362	7.4
2022~2026 연평균 증감률	4.6		4.3		4.5	

주: 농식품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복권기금, 국유재산, 기후대응기금), 식약처(식품안전) 예산 및 기금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6 나라살림 예산개요」,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회계·기금의 구성 및 예산

2.1. 회계·기금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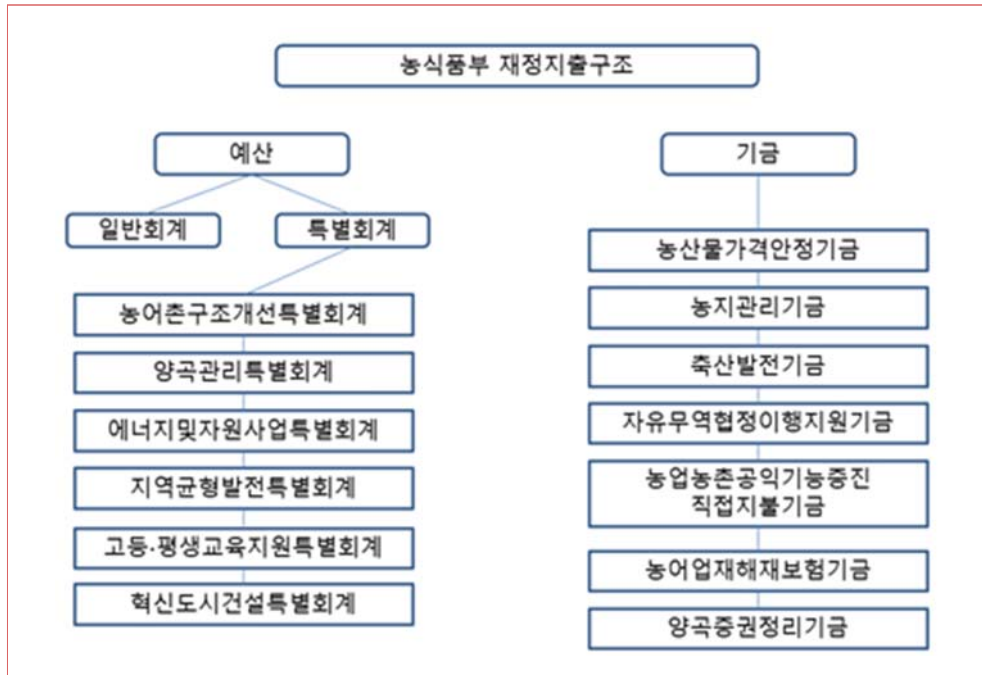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 체계는 재원 조건 및 활용 목적에 따라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운용됨.
- ▶ 예산은 다시 조세수입 등 일반 재원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국가재정지출을 수행하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세분됨.

- ▶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관련 부담금 등을 독립된 재원으로 삼아 세입·세출예산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운용되는 자금으로,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예산 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높다는 특징을 지님.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개의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됨.
 - ▶ 일반회계는 부처 본연의 일반적인 재정 집행과 소관 부서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초 회계를 말함.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과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분리 운영됨.
 - ▶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는 곡물의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하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는 에너지·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함.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되어 지역자율·지역지원·제주·세종 등 4개 계정으로 운영 중임.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로 운영됨.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당해 연도 소관 세출 사업은 없으나 과거 이전 기관의 수도권 부지 매각 등에 따른 자산 세입 관리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4년에 신설되었음.
- 농식품부 소관 기금은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음.
 -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은 유통구조 개선, 수급 및 가격 안정,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하며, 농지관리기금(농지기금)은 영농규모 적정화와 농지 집산화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전담함.
 - ▶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은 축산업 구조개선과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농업인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함.
 -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직불기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2020년에 개편·신설되었으며,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재해기금)은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함.

- ▶ 양곡증권정리기금(양곡기금)은 양곡관리사업 목적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의 원리금 상환 관리를 수행함.

[그림 1] 농식품부 재정지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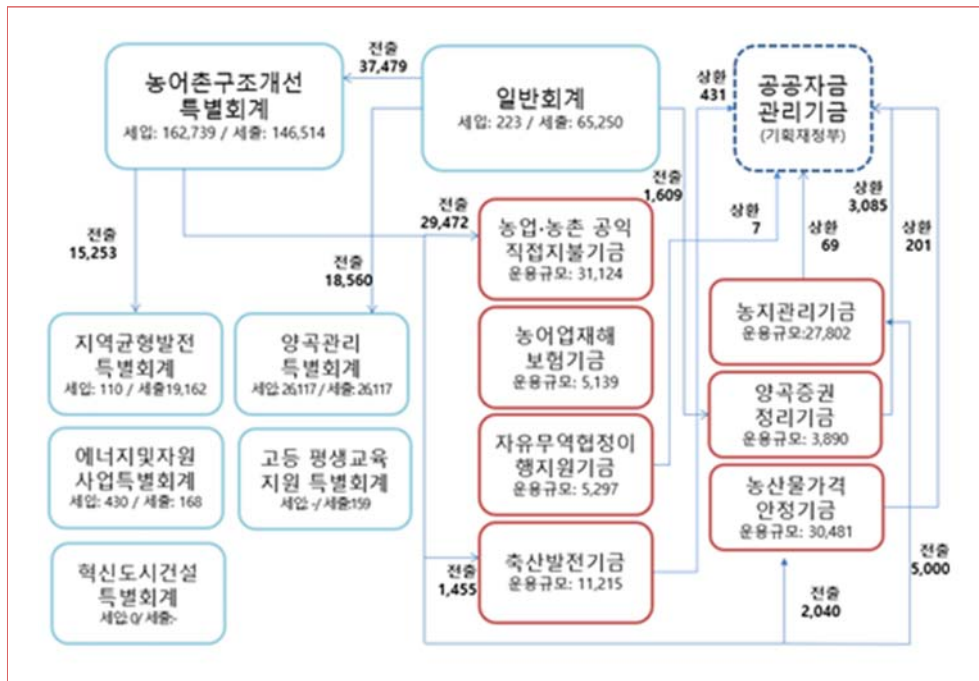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에서는 총 5조 7,648억 원 규모의 재원이 타 회계 및 기금으로 전출됨.
 - ▶ 주요 전출처별 규모를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3조 7,479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1조 8,560억 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609억 원이 각각 배분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부에서는 총 5조 3,220억 원의 재원 이전 흐름이 발생함.
 -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2조 9,472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5,253억 원이 전출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농지관리기금(5,000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2,040억 원), 축산발전기금(1,455억 원) 순으로 재원이 이전됨.

- ▶ 재정건전성 제고 및 기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규모는 양곡 증권정리기금 3,085억 원, 축산발전기금 431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1억 원, 농지관리기금 69억 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억 원 순으로 집계됨.

[그림 2] 농식품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구성

단위: 억 원



주: 총계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의 총 운용 규모¹⁾는 2022년 10조 6,735억 원에서 2026년 예산안 기준 11조 4,949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5개년(2022~2026년)간 연평균 1.9% 증가하여 전반적인 외연 성장을 지속함.
- ▶ 동 기간 기금별 재정 규모의 연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재해기금)이 거대재해 위험 보장 강화 등에 따라 37.2%의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함. 이어서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금)이 6.5%, 농

1) 기금의 운용규모의 경우, 수입 측면에서는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의 합을 의미하며, 지출 측면에서는 일반지출,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의 합으로 정의됨. 일반지출은 사업비와 운영비의 합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산금액임.

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이 4.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이 2.9%,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이 1.8% 순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 양곡증권정리기금(양곡기금)은 원리금 상환 진척 등에 따라 연평균 △14.5%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으며, 농지관리기금(농지기금) 역시 연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2026년 당초 계획 기준 전년 대비 증감률 측면에서는 양곡기금(△29.4%)을 제외한 전 기금이 순증하였으며, 특히 재해기금(26.6%↑), 농지기금(19.4%↑), 농안기금(17.3%↑) 등이 전년 대비 큰 폭의 증액을 기록하며 당해 연도 총합계 기준 전년 대비 9.5% 증가를 견인함.

[표 3] 기금 운용규모 변화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년대비 증감율	2022-2026 연평균 증감률
농안기금	25,842	23,274	23,948	25,978	30,481	17.3	4.2
농지기금	32,784	37,220	40,063	23,289	27,802	19.4	△4.0
축발기금	10,445	10,628	9,621	10,254	11,215	9.4	1.8
FTA기금	4,721	5,107	5,885	4,826	5,298	9.8	2.9
재해기금	1,450	905	3,704	4,059	5,139	26.6	37.2
양곡기금	7,271	11,419	15,311	5,509	3,890	△29.4	△14.5
공익기금	24,222	28,576	30,194	31,045	31,124	0.3	6.5
합 계	106,735	117,128	128,726	104,960	114,949	9.5	1.9

주 1) 공익기금의 연평균 증감률은 2022-2026년 기간의 연평균 증감률을 나타냄.

2) 당초 계획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

2.2. 회계·기금 사업예산 현황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 일반지출 규모는 20조 350억 원으로, 예산 10조 6,457억 원(53.1%)과 기금 9조 3,893억 원(46.9%)으로 구성됨.
 - ▶ 회계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가 5조 3,93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0.7%)을 차지하며, 이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가 2조 6,117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1조 8,496억 원, 일반회계가 7,585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가 168억 원,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가 159억 원 순임.

- ▶ 기금 일반지출의 경우,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금)이 3조 1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지관리기금(농지기금)이 2조 6,622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이 2조 5,211억 원,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이 8,542억 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이 2,889억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재해기금)이 506억 원 순임.
- 2026년도 예산 일반지출은 1.8% 감소한 반면, 기금은 11.7% 증가하여 대조를 보임.
 - ▶ 회계별로는 균특회계가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33.1% 급증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예특회계가 1.8%, 고특회계가 1.3% 순으로 증가함. 반면, 일반회계(△18.0%), 양특회계(△6.5%), 농특회계(△5.4%)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함.
 - ▶ 기금 일반지출 중에서는 농지기금이 전년 대비 45.8% 늘어나 전 기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농안기금이 8.9%, 공익기금이 0.6% 순으로 증가한 반면, FTA기금(△7.4%)과 축발기금(△6.0%)은 전년 대비 지출 규모가 축소됨.
- 2026년 기준 농식품부의 세부 사업 수는 예산 255개, 기금 95개로 총 350개 조항이 편제되어 전년(총 322개) 대비 관리 대상 사업 체계가 다소 확장됨.
 - ▶ 예산 세부 사업 수의 경우 농특회계가 121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회계가 83개, 균특회계가 45개, 양특회계가 4개, 예특회계와 고특회계가 각각 1개 순으로 나타남.
 - ▶ 기금의 세부 사업 수는 농안기금이 27개로 가장 촘촘한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어 축발기금이 21개, 농지기금이 19개, FTA기금이 15개, 공익기금이 6개, 재해기금이 4개, 양곡기금이 3개 순으로 편제되어 있음.

[표 4] 예산 및 기금 일반지출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25 예산			2026 예산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
	예산	예산 비중	세부사업수	예산	예산 비중	세부사업수	
예산	108,396	100.0	232	106,457	100.0	255	△1.8
일반회계	9,253	8.5	81	7,585	7.1	83	△18.0
농특회계	56,997	52.6	125	53,931	50.7	121	△5.4
에특회계	165	0.2	1	168	0.2	1	1.8
균특회계	13,898	12.8	20	18,496	17.4	45	33.1
고특회계	157	0.1	1	159	0.1	1	1.3
양특회계	27,925	25.8	4	26,117	24.5	4	△6.5
기금	84,089	100.0	90	93,893	100.0	95	11.7
농안기금	23,158	27.5	22	25,211	26.9	27	8.9
농지기금	18,265	21.7	19	26,622	28.4	19	45.8
축발기금	9,089	10.8	22	8,542	9.1	21	△6.0
공익기금	29,951	35.6	6	30,123	32.1	6	0.6
FTA기금	3,120	3.7	14	2,889	3.1	15	△7.4
재해기금	506	0.6	4	506	0.5	4	0.0
양곡기금	0	0.0	3	0	0.0	3	0.0

주: 세부 사업 수는 성과관리대상 및 성과관리 비대상 세부 사업 수를 합한 개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3. 사업 부문별 예산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관리 대상 사업예산 규모는 전년(18조 2,740억 원) 대비 6.9% 증가한 19조 5,469억 원으로 편성됨.
 - ▶ 사업 부문별 예산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공익직불제 등이 포함된 ‘농가경영안정’ 부문이 5조 4,033억 원으로 전체 성과관리 대상 예산의 27.6%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큼.
 - ▶ 이어 ‘양곡 및 종자 관리’가 2조 7,915억 원(14.3%),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이 2조 1,846억 원(11.2%), ‘생산기반’이 2조 1,711억 원(11.1%), ‘농산물수급 안정 및 유통효율화’가 1조 9,413억 원(9.9%) 순으로 크게 나타남.
 - ▶ ‘기타(탄소중립기반)’ 부문이 51억 원(0.0%)으로 가장 작은 재원 배분 폭을 보였으며, ‘행정 및 청사’(0.4%), ‘농산물품질관리’(0.5%) 순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성과관리 대상 사업예산 중 ‘국제협력협상’(△44.9%), ‘행정 및 청사’(△12.3%), ‘축산업진흥’(△7.6%), ‘양곡 및 종자 관리’(△6.3%), ‘농림축산검역/축산방역/축산물안전’(△5.9%)의 5개 부문을 제외한 전 유형의 예산이 증가함.
 - ▶ 이 중 ‘국제협력협상’의 급감은 해당 부문 내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국제농업협력(ODA)’ 예산이 전년 대비 53.2% 축소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농업신산업육성’으로, 전년 대비 41.2% 급증(3,838억 원 → 5,418억 원)함. 이는 2025년 기준 43개였던 성과관리 대상 세부사업 수가 2026년 55개로 확대 개편되는 등 미래 농업 기술 투자가 강화된 결과임.
 - ▶ 이외에 청년농 유입 및 지원 확대에 따른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이 35.8%,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가 17.2%, ‘생산기반’이 12.1%, ‘농산물수급 안정 및 유통효율화’가 8.9%, ‘식품외식산업육성’이 8.5%, ‘농가경영안정’이 4.7%, ‘농산물품질관리’가 2.7%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표 5] 농식품부 사업 부문별 예산

단위: 억 원, %

유형	2025	2026	증감률	성과관리대상 예산 비중
성과관리대상예산	182,740	195,469	6.9	100.0
국제협력협상	2,887	1,590	△44.9	0.8
농가경영안정	51,631	54,033	4.7	27.6
농림축산검역/축산방역/축산물안전	5,531	5,206	△5.9	2.7
농산물수급 안정 및 유통효율화	17,821	19,413	8.9	9.9
농산물품질관리	952	978	2.7	0.5
농업신산업육성	3,838	5,418	41.2	2.8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16,084	21,846	35.8	11.2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14,930	17,494	17.2	8.9
생산기반	19,369	21,711	12.1	11.1
식품외식산업육성	9,383	10,184	8.5	5.2
양곡 및 종자 관리	29,796	27,915	△6.3	14.3
축산업진흥	9,679	8,941	△7.6	4.6
행정 및 청사	788	691	△12.3	0.4
기타(탄소중립기반)	51	51	0.0	0.0

주: 성과관리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한 예산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농림 투·융자사업 예산

4.1. 보조형태별 보조금 예산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민간(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림 투·융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 보조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로 구분되며, 보조 재원의 성격에 따라 다시 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등 소모성 경비를 지원하는 경상보조와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 자본형성을 지원하는 자본보조로 세분됨.
- 2026년도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보조금 예산 규모는 전년(8조 9,892억 원) 대비 7.3% 증가한 9조 6,485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자치단체보조 예산은 전년(5조 6,603억 원) 대비 9.9% 증가한 6조 2,183억 원으로, 전체 보조금 예산의 약 64.4%를 차지함.
 - ▶ 자치단체보조 내 세부 유형별 규모는 경상보조가 4조 1,353억 원, 자본보조가 2조 831억 원 순임.
 - ▶ 전년 대비 증감률 측면에서는 자치단체보조 내 자본보조가 13.0% 늘어나 보조금 전체 유형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자치단체보조 내 경상보조 역시 8.4% 증가하였음.
- 민간보조 예산은 전년(3조 3,289억 원) 대비 3.0% 증가한 3조 4,302억 원 규모로, 전체 보조금 예산의 약 35.6%를 차지함.
 - ▶ 민간보조 내 세부 유형별 규모를 살펴보면, 물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경상보조가 2조 4,070억 원, 자산취득 등을 지원하는 자본보조가 1조 232억 원 순임.
 - ▶ 전년 대비 증감률의 경우 민간보조 내 경상보조는 8.2% 증가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민간보조 내 자본보조는 전년(1조 1,039억 원) 대비 △7.3% 감소한 1조 232억 원에 그쳐 전체 보조금 세부 유형 중 유일하게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표 6] 성과관리대상사업 보조형태별 보조금 예산

단위: 억 원, %

구분	2025	2026	증감률
합계	89,892	96,485	7.3
민간보조	33,289	34,302	3.0
(경상보조)	22,250	24,070	8.2
(자본보조)	11,039	10,232	△7.3
자치단체보조	56,603	62,183	9.9
(경상보조)	38,165	41,353	8.4
(자본보조)	18,438	20,831	13.0

주: 합계 수치는 성과관리대상 사업들의 보조금 예산 금액 합계를 뜻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2. 사업 부문별 보조금 예산 현황

- 사업 부문별 보조금 예산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농가경영안정’ 부문이 4조 1,921억 원으로 전체 보조금 예산의 43.5%를 차지함. 특히, 해당 부문 내에서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2조 9,703억 원)이 농가경영안정 보조금의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농식품부 성과관리 대상 전체 보조금의 30.8%에 달하는 규모임.
 - ▶ ‘생산기반’이 1조 9,312억 원(2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가 1조 1,777억 원(12.2%)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재원 배분 규모가 가장 적은 부문은 ‘농산물품질관리’로 66억 원(0.1%)에 불과하였으며, 이어 ‘행정 및 청사’(0.2%), ‘국제협력협상’(0.5%), ‘양곡 및 종자 관리’(1.1%) 순으로 적은 비중을 보임.
- 전년 대비 증감률 측면에서는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부문이 전년 대비 33.2% 급증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이러한 큰 폭의 증액은 당해 부문 예산의 19.9%를 차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341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기인함.
 - ▶ 이 외에 ‘행정 및 청사’(23.7%↑), ‘농산물수급 안정 및 유통효율화’(20.5%↑), ‘식품외식산업육성’(18.7%↑), ‘농업신산업육성’(13.7%↑), ‘생산기반’(7.9%↑), ‘농가경영안정’(2.5%↑)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기록함.

- 사업 부문별 보조금 예산 중 ‘농림축산검역/축산방역/축산물안전’ 부문은 전년 대비 $\Delta 7.8\%$ 감소하여 전 부문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함. 이는 보조금이 편성된 소관 세부 사업 중 ‘가축위생방역지원’과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에서 보조금 규모가 일제히 축소되었기 때문임.
- ▶ 이외에 ‘축산업진흥’($\Delta 6.7\%$), ‘국제협력협상’($\Delta 2.0\%$), ‘양곡 및 종자 관리’($\Delta 0.3\%$),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Delta 0.1\%$) 순으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함.

[표 7] 사업 부문별 보조금 예산

단위: 억 원, %

유형	2025	2026	증감률	성과관리대상 예산 비중
성과관리대상예산	89,892	96,485	7.3	100.0
국제협력협상	456	447	$\Delta 2.0$	0.5
농가경영안정	40,902	41,921	2.5	43.5
농림축산검역/축산방역/축산물안전	3,763	3,469	$\Delta 7.8$	3.6
농산물수급 안정 및 유통효율화	4,566	5,500	20.5	5.7
농산물품질관리	66	66	0.0	0.1
농업신산업육성	2,415	2,746	13.7	2.9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2,824	2,820	$\Delta 0.1$	2.9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8,840	11,777	33.2	12.2
생산기반	17,899	19,312	7.9	20.0
식품외식산업육성	2,755	3,271	18.7	3.4
양곡 및 종자 관리	1,092	1,089	$\Delta 0.3$	1.1
축산업진흥	4,179	3,900	$\Delta 6.7$	4.0
행정 및 청사	135	167	23.7	0.2
기타	-	-	-	-

주: 일부 세부 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에 작성된 보조금이 「성과계획서」의 예산안을 초과하는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 해석의 주의를 요 하며, 본 표 및 본문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3. 사업 부문별 융자금 예산 현황

- 2026년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융자금 예산은 3조 9,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함.
- 사업 부문별 융자금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이 1조 8,040억 원으로 전체 융자 예산 중 4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외식산업육

성' 6,534억 원(16.5%),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5,403억 원(13.6%), '축산업진흥' 5,026억 원(12.7%) 순임.

- ▶ '국제협력협상'과 '농림축산검역/축산방역/축산물안전'이 각각 40억 원, 66억 원으로 전체 용자금 예산 중 각각 0.1%, 0.2%의 적은 비중을 보임.
- 사업 부문별 용자금 예산 중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이 65.0%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 이는 해당 사업 부문 중 유일한 용자 사업인 '맞춤형농지지원(용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 이외에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12.1%, '식품외식산업육성'이 5.1% 증가하였음.
- 사업 부문별 용자금 예산 중 '국제협력협상'이 전년 대비 △33.0%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임. 이는 '국제협력협상'에 유일한 용자사업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용자)' 용자금이 4,0억 원으로 작년 (6,0억 원) 대비 33.0% 감소하였기 때문임.
 - ▶ 이외에 '축산업진흥'(△7.2%) 순으로 큰 감소율을 보임.
- '농가경영안정', '농림축산검역/축산방역/축산물안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함.

[표 8] 사업 부문별 융자금 예산

단위: 억 원, %

유형	2025	2026	증감률	성과관리대상 예산 비중
성과관리대상예산	32,465	39,700	22.3	100.0
국제협력협상	60	40	△33.3	0.1
농가경영안정	1,824	1,824	0.0	4.6
농림축산검역/축산방역/축산물안전	66	66	0.0	0.2
농산물수급 안정 및 유통효율화	5,484	5,403	△1.5	13.6
농산물품질관리	-	-	-	-
농업신산업육성	-	-	-	-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10,931	18,040	65.0	45.4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2,469	2,766	12.1	7.0
생산기반	-	-	-	-
식품외식산업육성	6,216	6,534	5.1	16.5
양곡 및 종자 관리	-	-	-	-
축산업진흥	5,415	5,026	△7.2	12.7
행정 및 청사	-	-	-	-
기타	-	-	-	-

주: 일부 융자사업의 경우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에 작성된 융자금이 「성과계획서」의 예산안과 다른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료 해석의 주의를 요하며, 본 표 및 본문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grifood Fiscal Report



05

해외 농식품 재정제도 현황

미국·EU 농업 분야 금융지원 정책 비교

5 해외 농식품 재정제도 현황

미국·EU 농업 분야 금융지원 정책 비교¹⁾

1. 미국 농업 분야 금융지원 정책

1.1. 근거 규정

- 미국 농업금융 체계는 통합농촌개발법(CONACT)을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연방 농업법(Farm Bill) 신용 부문(Title V)의 주기적 개정을 통해 운영되나 현행 실체 법적 근거는 여전히 2018년 농업법에 머물러 있음(CRS, 2026).
 - ▶ 미국 농업금융의 토대는 「통합농촌개발법(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 이하 CONACT)」이며, 농업법 제5편(Title V, Credit)이 이를 개정·재승인함. 정책의 중심이 되는 2018년 농업법(P.L. 115-334)은 2023년 만료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년씩 연장(1차 P.L. 118-22, 2차 P.L. 118-158)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5년 11월 제정된 연장법(P.L. 119-37)에 의거하여 FY2026 및 2026 작물연도까지 효력이 유예됨.
 - ▶ 농업법 제5편은 농장소유대출·보전대출(Subtitle A), 운영대출(Subtitle B), 비상대출(Subtitle C), 행정·기타 조항(Subtitle D·E)으로 다각화되어 농가 신용 공급의 기준을 제시함.
- 2025년 7월 제정된 대규모 예산조정법(OBBBA)의 입법적 제약으로 인해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신용 부문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됨(CRS, 2026).

1)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기본연구과제인 「농업경영체의 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연구책임자: 김미복 선임연구위원) 보고서 내용을 정리·보완한 것임.

- ▶ FY2025 예산조정법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P.L. 119-21)」는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의 특성상 예산 효과가 없는 정책 변경이나 재량 지출 프로그램의 재승인을 허용하지 않음. 이에 따라 OBBBA는 상품(Title I)·보전(Title II)·영양(Title IV)·작물보험(Title XI) 등 의무지출 부문만 개정하였고, 신용 부문(Title V)은 전혀 개정하지 않았음.
- ▶ 결과적으로 농가서비스청(FSA) 대출 한도 및 자격요건의 현행 근거는 기존 2018년 농업법 기준으로 유지됨. 다만, OBBBA를 통해 마케팅지원대출(MAL) 프로그램이 2031년까지 연장되고 주요 작물 용자단가가 인상되는 등 간접적인 금융 환경 변화가 발생함.
- 2026년 현재 차기 농업법안(H.R. 7567)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상원 심사가 지연되면서 최종 입법은 계류 상태임(CRS, 2026).
 - ▶ 하원 농업위원회는 2026년 2월 13일 신규 농업법안인 「H.R. 7567 (Farm, Food,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26)」을 발의하여 4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224 대 200)시킴. 의회예산처(CBO)의 재정점수 추정 결과, 본 법안은 11년(FY2026-FY2036) 장기 기준으로는 의무지출에 재정중립적이나, 단기 6년(FY2026-FY2031) 기준으로는 의무지출을 1억 6,200만 달러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됨.
 - ▶ H.R. 7567 내 신용 부문(Title V)은 FY2027-2031 기간 동안 재량 세출권한 11.9억 달러, 추정 지출 3.25억 달러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법안 통과 시 2031년까지 효력을 갖게 됨. 그러나 제119대 의회에서 상원 농업위원회의 자체 법안 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금융의 장기적 제도 안착은 미제정 상태로 계류 중임.

[표 1] H.R. 7567 신용 부문(Title V) 주요 개정 제안

항목	현행(2018년 농업법)	H.R. 7567 개정안
직접 농장소유대출 한도	\$600,000	\$850,000
직접 운영대출 한도	\$400,000	\$750,000
보증 농장소유대출 한도	\$2,343,000(불가연동)	\$3,500,000(불가연동)
보증 운영대출 한도	\$2,343,000(불가연동)	\$3,000,000(불가연동)
마이크로대출 한도	\$50,000	\$100,000
영농경력 요건(직접 FO)	3년	2년
보증→직접 재융자	제한적	distressed 대출 재융자 명문화 (1년 내 규칙 마련)
EZ 보증대출	운영 중	신속승인 확대
신규농 50% 배정·상속재산 재대출	운영 중	2031년까지 재확인·재승인

자료: CRS, R48918(2026.6.), Table 8;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Completing the Job"(2026); DTN(2026.5.).

1.2. 금융지원수단 (USDA FSA Loans)

- 미국 농무부 농가서비스청(FSA)은 가족농의 창업·유지·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과 위험 분담 방식에 따라 직접대출(Direct Loan)과 보증대출(Guaranteed Loan)의 이원적 신용 지원 체계를 운영함(USDA FSA, 2026).
 - ▶ 직접대출은 FSA가 연방 세출예산으로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형태임. 반면 보증대출은 상업은행, 농업신용기관(FCS), 신용조합 등 민간 대출기관이 집행하되 FSA가 원리금 손실의 최대 90%(적격 신규농 및 사회적 취약계층은 95%)를 보증하며, 대출액의 1.5%를 보증수수료로 부과함.
 - ▶ 보증대출 구조에서 FSA의 직접적인 고객은 차주(농가)가 아닌 민간 대출기관이며, 대출의 소유 및 관리 책임 역시 대출기관에 귀속됨. FSA 농업대출의 궁극적 목표는 농가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으며, 민간 조달 능력이 확보되면 임시적 신용 지원 체계는 종료됨.
- FSA가 운용하는 직접대출과 보증대출의 세부 조건은 농업법 제5편(Title V)의 법정 한도 안에서 차주의 재정 자립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정밀하게 차등 설계되어 있음.
- FSA 직접대출은 자본을 직접 공급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외 농가를 보호하며, 자산 취득 목적 및 소규모 정책 대상에 따라 긴밀히 분화되어 운영됨(USDA FSA, 2026).
 - ▶ 직접 농장소유대출 (Direct Farm Ownership)은 농지 구입·영농 규모 확대·시설 신축·토양수자원 보전·거래종료비용 등에 활용되며, 한도 60만 달러 및 최대 40년의 장기 상환 시계를 가짐. 금리는 연방 자금조달비용에 연동된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2026년 6월 현재 연 5.875% 수준임.
 - ▶ 직접 다운페이먼트 특례 (Direct Down Payment)는 신규농과 후계농의 초기 농지 취득을 촉진하기 위한 최우대 금융 상품임. 대출액은 매매가·감정가·66만 7천 달러 중 최솟값의 45%(최대 30만 150달러) 범위에서 산정되며 자부담 5%, 상환 20년 조건임. 금리는 직접 FO 금리에서 4%p를 차감(하한 1.5%)하도록 연동되어, 2026년 6월 현재 실금리 연 1.875%로 자금 부담이 가장 낮음.
 - ▶ 직접 운영대출 (Direct Operating)은 가축·종자·장비·연료·농약·작물보험 등 영농에 필요한 단기 운영비 지출과 소규모 수리, 일부 기존 부채의 재융자에 사

용되며 한도 40만 달러에 상환 기간은 1~7년(2026년 6월 기준 금리 5.000%)임.

- ▶ 직접 마이크로대출 (Microloan)은 농장소유 및 운영 목적으로 각 5만 달러(합산 최대 10만 달러)까지 제공하는 직접대출의 하위 옵션임. 신청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소규모·비전통·틈새시장 영농 진입을 지원하며, 기본 직접대출과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며 운영 마이크로는 신규 영농인 및 제대군인에 한해 연 5%의 상한 금리를 부여함.
- ▶ 직접 비상대출 (Direct Emergency)은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재해 실손실액의 100% 또는 50만 달러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함. 상환 기간은 비부동산 용도 1~7년, 부동산 물리적 손실 복구는 최대 40년까지 보장되며, 금리는 OL 금리에 1%p를 가산하되 3.75%를 초과할 수 없어 2026년 6월 현재 최고 상한인 연 3.750%가 적용 중임.
- FSA 보증대출은 대규모 자금 조달 수요 충족과 거래 위험 완화를 목표로 민간 금융시장의 자본력을 결합하며, 정책 목적에 따라 행정 요건을 차등 완화함(USDA FSA, 2026).
 - ▶ 농장소유·운영·보전대출 (Guaranteed FO/OL/CL)은 상업 금융기관이 자금을 집행하고 FSA가 원리금을 보증하는 방식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타깃으로 매 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34만 3천 달러의 높은 통합 한도를 부여하며, 상환 기간은 자산 속성에 따라 농장소유 40년, 운영 7년, 보전 30년으로 구분하고 대출액의 1.5%를 보증수수료로 징수함. 특히 보전대출(CL)은 NRCS 승인 보전 활동에만 사용되는 보증 전용 상품으로, 가족농 요건 및 민간 금융 거절 증명(Credit elsewhere) 요건이 면제되어 대규모·재정 안정 농가도 이용할 수 있음.
 - ▶ EZ 보증대출 (EZ Guarantee)은 소규모·틈새시장 농가의 신속한 금융 접근을 위해 대출 한도를 10만 달러로 축소하는 대신, 신청 서류를 대폭 감축하여 민간 대출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인 보증대출의 간소화 버전임 (상환 기간: 농장소유 40년, 운영 7년).
 - ▶ 농지 매매계약 보증제 (Land Contract Guarantee)는 농지를 소유한 매도인 (Seller)에게 연방 보증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세대 이전을 결합·유도하는 독특한 제도임. 매매가 상한은 50만 달러(또는 시장가치 중 낮은 값)이며, 최소 20년 이상 분할상환하되 최초 10년 이내의 풍선상환(만기 일시 상환)은

엄격히 제한됨. 금리는 직접 FO 금리에 3%p를 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 유형은 연 원리금 3년치와 세금·보험료를 묶어 보장하는 ‘신속지급 보증’과 잔여원금의 90%를 보증하는 ‘표준 보증’으로 나누어 공급됨.

[표 2] 주요 Farm Loan 프로그램의 한도·조건·금리

대출 유형	최대 한도	상환·조건	금리(2026.6)
Direct Farm Ownership	\$600,000	최대 40년, 기관 조달비용 연동 고정 금리	5.875%
Direct Down Payment	매매가·감정가·\$667,000 중 낮은 값의 45%(최대 \$300,150)	20년, 자부담 5%	1.875% ¹⁾
Direct Operating	\$400,000	1~7년	5.000%
Direct Microloan (FO·OL)	각 \$50,000(합산 \$100,000)	FO 25년·OL 7년, 간소 신청	직접 FO·OL 동일 ²⁾
Direct Emergency	실손실 100% 또는 \$500,000 중 낮은 값	비부동산 1~7년 / 부동산 최대 40년	3.750% ³⁾
Guaranteed FO / OL / 보전(CL)	\$2,343,000(물가연동)	FO 40년·OL 7년·보전 30년, 보증수수료 1.5%	대출기관 협상 (FSA 상한 내) ⁴⁾
EZ Guarantee	\$100,000	FO 40년·OL 7년	대출기관 협상 (FSA 상한 내)
Land Contract Guarantee	\$500,000 (또는 시장가치 중 낮은 값)	최소 20년 분할·10년 내 풍선상환 불가, 자부담 5%	직접 FO금리 +3%p 이내

주 1) 다운페이먼트 금리 = 직접 FO 금리 -4%(하한 1.5%).

2) 운영 마이크로는 신규·제대군인 5% 상한.

3) 비상대출 금리 = 직접 OL 금리 +1%(상한 3.75%).

4) 보증대출 상한: 5년 미만 SOFR+6.75%p, 5년 이상 5년 국채금리+5.5%p(SOFR 1.75% 미만 시 각 +1%p).

※ 특정목적 대출(상품대출 4.750%, FSFL 4.000~4.625%)은 제3절 참조.

자료: USDA FSA, Farm Loan Information Chart(2025.10.)¹⁾; “USDA Announces June 2026 Lending Rates for Agricultural Producers”(2026.6.1.).

- 미국 연방 농업금융 시스템의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는 재정의 효율성과 농가 리스크 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원리를 반영함(USDA FSA, 2026).
 - ▶ (직접·보증의 이원적 보완 체계 확립) 자본력과 신용도가 취약해 민간 금융 조달이 불가능한 한계 농가에는 낮은 금리와 제한된 한도의 직접대출을 통해 안전망을 제공하고, 건실한 대형 농가에는 민간 자본을 매개로 높은 한도의 보증대출을 열어주는 상호 보완적 시장 생태계를 구축함.
 - ▶ (영농 주기별 목적적 특례 배치)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진입 장벽 제거(다운페이먼트), 가혹한 자연재해 위기 극복(비상대출), 영농 자산의 안정적인 세대 이전 및 매도인 위험 완화(매매계약 보증) 등 영농 생애주기별 핵심 리스크 파트에 맞춤형 정책 수단을 조율·배치함.

- ▶ (자산 속성별 장단기 상환 시계 분리) 회수 기간이 길고 고착성이 높은 영농 기반 부동산성 자산(농지·시설)에는 40년의 초장기 대출 시계를 적용하여 상환 능력을 장기 보장하는 반면, 자금 회전이 빠른 소모성 운영 자금에는 1~7년의 단기·중기 시계를 적용함으로써 연방 금융 자산의 자본 건전성을 동태적으로 제어함.

1.3. 특정 목적 대출

- 농가서비스청(FSA)은 상품신용공사(CCC)를 대행하여 농가의 수확 후 보관 및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두 가지 핵심 단기·중기 금융 프로그램(FSFL 및 MAL)을 운영함(USDA FSA, 2026).

■ 농산물 저장시설 대출(Farm Storage Facility Loan, FSFL)

- 농산물 저장시설 대출(Farm Storage Facility Loan, FSFL)은 수확 후 농가의 자가 보관 및 취급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제공되는 저금리 시설자금임(USDA FSA, 2026).
 - ▶ 2000년 5월 도입 이래 3만 3천 건 이상이 집행되어 약 9억 부셀 규모의 자가 저장능력이 확충됨. 적격 품목은 곡물, 두류, 과수, 유제품, 육류, 양식 등 광범위하며, 최근 통제대기(Controlled atmosphere) 저장시설과 들소(Bison) 육류가 추가됨. 신품·중고·고정식·이동식을 불문하고 저장 창고, 벌크탱크, 냉장·운반 트럭 장비 등에 널리 활용됨.
 - ▶ 저장시설은 건당 최대 50만 달러, 저장·운반 트럭은 10만 달러 한도로 운영됨. 차주는 자기자본 15%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대출은 총비용의 85% 이내), 대출액에 따라 3~12년의 상환 기간이 부여됨. 신청자는 최근 3년간의 생산 실적을 근거로 저장 수요를 입증해야 하며, 금리는 2026년 6월 기준 만기별로 연 4.000~4.625% 수준임.
 - ▶ 2016년 신설된 FSFL 마이크로 옵션은 한도를 5만 달러로 축소하는 대신 자기자본 부담을 5%로 낮추고, 3년 생산 이력 요건을 면제하여 농가 스스로 저장 수요를 자기신고(Self-certify)할 수 있도록 한 간소화 특례임. 소규모·신규·틈새 농가의 시설 자금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됨.

■ 마케팅 지원 대출(Marketing Assistance Loan, MAL)

- 마케팅 지원 대출(Marketing Assistance Loan, MAL)은 수확기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가가 투매를 피하고 즉각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 상품 담보금융임(USDA FSA, 2026).
 - ▶ 농가는 수확 후 자가보관 중인 곡물이나 창고증권(Warehouse receipt) 기반의 상업보관 곡물을 담보로 약정 시 융자금을 즉시 수령하며, 만기는 약정일로부터 최대 9개월임. 담보 곡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Beneficial interest, 통제권 및 소유권)을 유지해야 자격이 인정됨. MAL 융자의 이자율은 약정 시 고정(CCC 차입금리+1%)되며 2026년 6월 현재 연 4.750%임.
 - ▶ 융자금은 ① 융자단가에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거나, ② 게시카운티가격(PCP)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하며, ③ 비소구권(Nonrecourse) 대출의 경우 만기 시 담보 곡물을 CCC에 인도함으로써 전액 상환에 갈음할 수 있음. ②의 방식처럼 융자원금보다 낮은 PCP로 상환할 경우, 그 차액을 시장대출이익(Marketing Loan Gain, MLG)이라 부르며 이는 농가의 실질적 수익이 됨.
 - ▶ 농가가 MAL 융자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현재 PCP가 융자단가보다 낮을 때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제도가 대출결손보전금(LDP)임. 계산 방식은 MLG와 동일하며, 동일 곡물에 대해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 2018년 농업법 이후 적용된 규정에 따라, 밀·옥수수·대두 등 주요 대상품목(Covered commodities)과 땅콩에 대한 LDP 및 MLG는 개인별 지급한도(\$125,000) 및 평균조정총소득(AGI) 자격 요건의 적용에서 전면 제외됨. (단, 양모·꿀 등 비대상품목은 별도 적용됨.)
- 최근 2025년 OBBBA의 통과로 MAL 제도의 적용 시한이 연장되고, 주요 곡물의 법정 융자단가가 일제히 상향 조정됨.
 - ▶ 예산조정법인 P.L. 119-21(OBBBA)은 MAL 프로그램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과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여 주요 작물의 법정 융자단가를 약 10% 수준으로 인상함. USDA는 이에 따라 2026 작물연도 단가를 2026년 4월 8일 확정 공고함(farmdoc daily, 2025).

[표 3] OBBBA에 따른 MAL 용자단가 인상

작물	종전(2018년법)	OBBBA(2026~)
옥수수	\$2.20/부셸	\$2.42/부셸
대두	\$6.20/부셸	\$6.82/부셸
밀	\$3.38/부셸	\$3.72/부셸
원당(raw cane sugar)	—	평균 24¢/lb(2025-2031)

자료: farmdoc daily, "Impacts of the Commodity Title Changes Under OBBBA," 2025.7.; USDA/FSA, "2026 Marketing Assistance Loan Rates," 2026.4.8.

1.4. 희생 및 재기 관련 프로그램

■ 채무조정서비스 (PLS, Primary Loan Servicing)

- 채무조정서비스(PLS)는 재정난 또는 연체 상태에 빠진 직접대출 차주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핵심 뼈대 프로그램임(USDA FSA, 2026; Federal Register, 2024).
 - ▶ 연체 원인이 질병·사망, 이상기상, 병해충 등 차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객관적 사유에 기인해야 함. 90일 이상 연체 시 FSA가 서면 통지하며, 차주는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FSA는 접수 후 60일(부동산 감정 수반 시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며, 적격 차주는 45일 이내에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 채무 재구성을 위해 기간 연장(Rescheduling), 재상환(Reamortization), 채무 통합(Consolidation), 상환 유예(Deferral), 채무 감면(Write-down)의 5대 수단이 동원됨. 법정 승인 조건으로서 강제 압류·청산 시의 회수액보다 같거나 높은 순회수(Net recovery) 가치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 상환능력 평가(Feasible Plan Test)'를 거쳐 실행 가능성을 엄격히 판정함.
 - ▶ 상환계획을 도출하지 못한 차주에게는 담보의 순회수가치로 채무를 매입(Buyout)할 기회를 부여하되, 미이행 시 대출 가속(만기 전 전액 상환 요구)을 통해 청산에 돌입함. 단, 보전계약(Conservation Contract) 체결을 통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는 우회 수단도 존재함. 심사의 형평성을 위해 전산 프로그램인 eDALR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일관되게 적용함(USDA FSA, 2026; Federal Register, 2024).

■ 재해 유보 (DSA) 및 부실차주 유보 (DBSA)

- 재해 지역 농가를 신속히 구제하는 전통적 유보 제도와 더불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원을 결합해 상시 신청이 가능한 신설 상환유예 옵션이 도입됨 (USDA FSA, 2026; Federal Register, 2024).
 - ▶ 이는 비상 구제 체계를 넘어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누적된 농가의 상시적 재정 부담까지 방어하려는 신용 회생 전략임.
- 재해 유보(Disaster Set-Aside, DSA)는 대통령, 농무부 장관, 또는 FSA 관리자가 지정한 연방 재해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연 상환분 1회차를 대출 만기 시점으로 강제 연기해 주는 제도임.
 - ▶ 유보 대상액은 해당 회차의 미상환 원리금이며, 유보된 원금에는 기존 약정 금리로 이자가 지속 발생함. 차주는 납부 가능한 자금은 우선 납부해야 하며, DSA 서류 집행일 전 기준으로 165일 이상 연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됨. 본 제도는 일시적 충격 완화용이므로 DSA 조치만으로 자립 상황이 불가능할 경우 PLS 재구조화 체계로 강제 전환됨.
- 부실차주 유보(Distressed Borrower Set-Aside, DBSA)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22006조의 재원을 바탕으로 2024년 8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상환유예 프로그램임.
 - ▶ 재정난 또는 연체 위기에 직면한 직접대출 차주(농장소유·보전·토양수자원·운영·비상대출 포함)를 대상으로 현 회차 상환분을 만기로 유예함. DSA와 달리 범정부적 재해 지역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체계(2024년 9월 25일 시점 잔존 직접대출 대상)이며, 전면적 재구조화인 PLS에 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점이 특징임. 단, 유예 조치를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고 합리적 실행 가능계획에 도달할 수 있음을 차주가 입증해야 함.

■ 긴급 대출 (EL) 및 보증-직접 재융자 연계

- 연방 지정 재해 하에서의 긴급 유동성 공급 수단과 함께 민간 보증대출의 부실을 연방 직접 채권으로 전환하는 재융자 제도가 논의 중임.
 - ▶ 이는 재해 피해 농가에 즉각적인 수혈을 제공하면서, 민간 금융권에서 이탈할 위기에 처한 부실 차주를 연방 채권으로 흡수해 도산을 막으려는 신용 보장 보완책임.

- 긴급 대출 (Emergency Loans, EL)은 대통령 또는 장관이 지정한 재해 및 격리 지역 농가에 FSA가 직접대출 형태로만 공급하는 재해 복구 자금임(USDA FSA, 2026).
 - ▶ 생산손실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단일 영농·목축 부문에서 최소 30% 이상의 생산량 손실을 정량 입증해야 함 (물리적 시설 파괴 복구는 30% 기준 미적용).
 - ▶ 융자 자금은 필수 자산 복원, 재해연도 운영비 및 생계비, 영농 재조직 및 비부동산 농가부채 재융자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최대 50만 달러 한도에 운영대출 (OL) 금리+1%p(최고 상한 3.750%)의 우대 금리가 부여됨.
- 보증 대출의 직접 대출 재융자 (Guaranteed-to-Direct Refinancing)은 민간 금융기관이 집행한 보증대출 중 부실 위기에 처한(Distressed) 채권을 FSA 직접 대출로 전환하여 재융자하는 제도임 (단, FSA 직접대출의 인당 법정 한도는 준수해야 함)(CRS, 2026).
 - ▶ 하원본회의를 통과한 차기 농업법안(H.R. 7567, 미제정 법안)은 이를 연방법률에 명문화하는 안을 담고 있으나, 정책 수혜의 적용 시점을 차주의 완전한 디폴트(Default) 및 민간의 청산 절차 개시 이후로 엄격히 제한하자는 일부 안을 두고 연방 의회와 지속 가능한 농업 단체 간의 입법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

1.5. 신규 진입·청년 대상 금융지원

- 농무부 농가서비스청(FSA)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 완화와 후계 인력의 안정적 진입을 위하여 재정 쿼터제와 자산 형성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함(USDA FSA, 2026).
 - ▶ 이는 자본력이 취약한 신규 진입자를 보호하는 핵심 전략으로 일반 대형 차주와의 예산 경쟁을 차단하고, 고령 은퇴농의 영농 자산이 다음 세대로 선순환되도록 유도함.
- 법정 신규농(Beginning Farmers)은 영농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영자로 제한됨. 자본 집중 방지를 위해 신청 시점 기준 카운티 평균 농장 규모의 30% 이하를 소유해야 함(USDA FSA, 2026).
 - ▶ FSA는 신규농,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 농업인의 자본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매 회

계연도 대출 자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사전 배정함.

- ▶ 법정 배정 비율은 직접 농장소유대출 75%, 직접 운영대출 50%, 보증 운영대출 40%, 보증 농장소유대출 40%임.
- ▶ 전용 계정 유지 기한은 직접대출의 경우 매년 9월 1일, 보증대출은 매년 4월 1일 까지임. 미소진 예산은 기한 종료 후 일반 차주에게 개방함.
- 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Direct Down Payment)은 신규농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해 공급되는 배타적 특례 상품으로, FSA 포트폴리오 중 100% 용자를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농장소유대출임(USDA FSA, 2026).
 - ▶ 차주는 총 매매가의 5%를 자부담함. FSA는 매매가·감정가·66만 7천 달러 중 최솟값의 45%(최대 30만 150달러)를 대출하며, 상환 기간은 20년임.
 - ▶ 금리는 직접 FO 금리에서 4%p를 차감(하한 1.5%)하도록 연동됨. 2026년 6월 현재 실금리는 연 1.875%로 전체 상품 중 자금 부담이 가장 낮음.
 - ▶ 잔여 분담분은 민간 은행, 협동조합, 또는 매도자가 조달함. 연방 재정 부실 방지를 위해 합산 용자액은 매매가의 95%를 초과할 수 없음. 민간 분담분은 최소 30년 분할 상환이 원칙이며, 최초 20년 내 풍선상환(만기 일시 상환)이 엄격히 금지됨.
- 공동금융제도(Joint Financing, 참여대출)는 자부담 능력이 다소 부족한 진입 가구에 레버리지 기회를 제공함(USDA FSA, 2026).
 - ▶ FSA가 매입가 또는 감정가의 최대 50%를 직접 대출하고, 잔여분은 상업 은행, 주(州) 정부, 매도자 자금으로 조달하는 일종의 매칭 금융 방식임.
 - ▶ 금리는 직접 FO 금리에서 2%p를 차감(하한 2.5%)함. 2026년 6월 실금리는 연 3.875%이며 신규농의 자본 접근성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함.
- 청소년 대출(Youth Loans)은 인구 과소 지역 청소년의 실무 경영 역량과 자립성 함양을 위한 소액 금융 수단임(USDA FSA, 2026).
 - ▶ 대출 종료 시점 기준 만 10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인구 5만 명 이하 농촌 거주 청소년이 대상임. 4-H, 미국미래농업인연합(FFA) 등 공식 지도자의 프로젝트 감독하에 최대 1만 달러까지 집행됨.
 - ▶ 신용 자립성 확립을 위해 청소년 본인이 직접 법적 상환 책임을 지는 구조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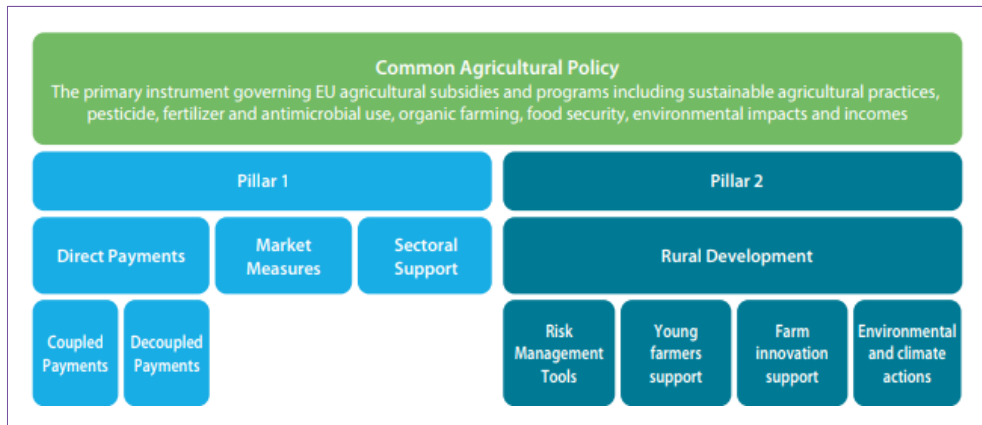
환 능력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예외적 시점에 한해서만 공동서명자(Co-signer)를 요구함.

2. EU 농업 분야 금융지원 정책

2.1.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 EU 공동농업정책(CAP)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가소득 보호, 환경 보전 및 농촌 활력 유지를 목표로 하며, 2023년부터 국가별 CAP 전략계획(CAP Strategic Plans)이라는 통합 틀 아래 운영됨(European Commission, 2026).
 - ▶ 기존의 Pillar 1(직불금 및 시장조치)과 Pillar 2(농촌개발)의 정책적 구분은 그대로 유지함. 다만 각 회원국이 단일 통합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거버넌스로 전환됨에 따라, 벨기에의 2개 계획(플란데런·왈로니)을 포함한 총 28개 전략계획이 2023년 1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됨.
 - ▶ 본 전략계획은 소득보장, 시장지향, 가치사슬 내 농업인 지위 향상, 기후위기 대응, 자원 효율성, 생물다양성 보전, 청년농 지원, 농촌 혁신성장, 사회적 기여라는 9개 구체목표(Specific objectives)를 추구함. 특히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CAP 총지출의 40%가 기후행동(Climate action) 영역에 집중 배정됨.
- CAP 재정구조는 정책 영역에 따라 기금을 명확히 분리하되, 대다수 예산을 회원국과의 공유관리 방식으로 집행하여 정책의 현지 적합성을 확보함.(European Commission, 2026)
 - ▶ 재정구조상 시장조치 및 직불금(에코스킵 포함) 중심의 Pillar 1은 유럽농업보장기금(EAGF)으로, 투자·혁신·농촌개발 중심의 Pillar 2는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으로 구분됨. 이 중 EAFRD의 2021-2027 회계연도 예산은 차세대 EU 회복기금(NGEU) 81억 유로를 포함하여 총 955억 유로 규모임.
 - ▶ 실질적인 핵심 집행 기간인 2023-2027 전략계획 프레임워크에는 총 2,640억 유로의 EU 재원이 투입·배정됨. 개별 기금 지출을 포함한 CAP 전체 예산의 99.3%는 EU 집행위와 회원국이 책임을 분담하는 공유관리(Shared management) 방식으로 집행됨.

[그림 1] EU CAP 구조



자료: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Tools for Agriculture in the EU (2025); 김미복 외 (2025)에서 재인용

2.2. 금융지원수단 (Financial Instruments)

- EU는 미국식의 정부 직접 대출 방식과 달리, 회원국과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금융수단을 공급하는 5대 공유관리 기금 체계를 가동함(fi-compass, 2025).
 - ▶ 유럽지역개발·결속기금(ERDF/C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 유럽사회기금(ESF/ESF+), 유럽해양수산양식기금(EMFF/EMFAF), 이민통합기금(AMIF)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개입함.
 - ▶ 사전평가(Ex-ante assessment)를 거쳐 민간 금융 경색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증명된 영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입함. 원금 회수 후 재투자가 가능하여 보조금 대비 예산 효율성이 극대화됨.
- 공공 금융 공급망은 융자(Loans), 보증(Guarantees), 자본투자(Equity), 준자본투자(Quasi-equity)의 4대 포트폴리오로 범주화됨.
 - ▶ 통상적인 EU 전체 금융수단 비중 통계의 1차 기준(2020년 말)은 융자 43%, 보증 26%, 자본 18%임. 최근 갱신 자료(2022년 말) 기준으로는 융자 약 45%, 보증 약 28% 수준으로 보고되며, 이는 거대 기금인 결속정책(ERDF/CF)의 누적 실적에 기반한 참고치임(European Commission, 2021).

■ 융자 (Loans)

- 융자는 EU 내 영농 및 농촌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전통적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유동성 공급 한계를 보완함(fi-compass, 2024).
 - ▶ EAFRD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 기업의 80% 이상이 융자의 정책적 중요성을 확언함. 관리당국이 직접 또는 지주펀드(Holding fund)를 매개로 금융중개기관에 자금을 결합·예치하면, 해당 중개기관이 민간 자본과 공동 매칭하여 최종 적격 수혜자에게 대출하는 구조임.
 - ▶ 시장 일반 대출 대비 저금리, 무담보 특례, 장기 만기, 수수료 절감을 패키지로 보장하여 조달 비용을 낮춤. 2020년 말 기준 ERDF 금융수단 약정액의 약 43%(2022년 말 기준 약 45%)가 본 수단에 투입됨.

[표 4] 회원국 융자 프로그램 사례

국가	프로그램명	주요 대상	대출조건	특징
아일랜드	GSLS	농어업인 SMEs SMCs	25,000~3mils (190,000a) 7~10년	무담보, 기후투자 0.25% 이율 인하 보증가능
체코	Environmental Risk Loan	기업·공공기관 (지역)	최대 100% 대출	최대 25% 보조금과 결합 가능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AL VIA	지역 SMEs	투자 85~95% 대출	보조금 5~15% 결합
라트비아	Energy Efficiency Loan	공동주택·소유주	은행 대출 거절 시 직접 대출	보증수수료 5년 무상
프랑스 (La Réunion)	i-RUN	지역 SMEs	EIF-은행 공동출자	위험공유형 대출
폴란드	Broadband Loan	인프라 기업	유연 조정형	초기 2.7억 유로 규모

자료: Fi-compass (2024); 김미복 외 (2025)에서 재인용

■ 보증 (Guarantees)

- 보증 수단은 연방 재정을 리스크 보완재로 투입하여 고위험 프로젝트 및 취약 차주에 대한 민간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을 유도함(fi-compass, 2024).
 - ▶ 관리당국이 보증기관에 재원을 공급하면 보증기관이 시중은행과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임.

- ▶ 정책 목표에 따라 무상 또는 저율 수수료로 제공되며 중소기업 지원(폴란드 Biznesmax), 도시개발, 코로나19 대응 등에 활용됨.
- ▶ 2020년 말 기준 26%(2022년 말 기준 약 28%)가 투입되어 유럽 내 약 49만 개 기업의 자금 물꼬를 틔.
- 리스크 통제 방식과 보증 주체에 따라 포트폴리오 보증, 개별 보증, 역보증 체계로 삼원 분화됨.
 - ▶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및 자기자본 규제 부담을 완화함. 보증기관 최대책임을 제한하는 캡 설정형(선손실(First-Loss)형 포함)과 책임한도가 없는 캡 미설정형으로 세분됨.
 - ▶ 개별 대출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개별 보증은 보증기관의 사후 개입도가 높음. 역보증(Counter-Guarantee)은 보증기구 간 리스크를 다원 분산하는 구조로, 유럽투자기금(EIF)이 EGF를 통해 각국 보증기구에 신용을 공여하거나 이탈리아 ISMEA 등 국가 공기업이 지역 보증기구를 재보증하여 청년농 및 신규 창업자의 신용을 보완함.

■ 자본투자·준자본투자 (Equity / Quasi-equity)

- 자본투자는 단순 채권 공급을 넘어 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의 자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장기 가치사슬 투자 생태계를 정착시킴(fi-compass, 2024).
 - ▶ 관리당국이 자본투자 펀드에 재원을 약정하면 펀드가 최종 수혜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로, 통상 4~10년 보유 후 지분 매각(Exit)으로 회수함.
 - ▶ 자금 수혈 외에도 멘토링, 이사회 참여, 네트워크 개발 등 비재정적 성과관리를 필수 결합하여 혁신 스타트업(독일 베를린 IBB Ventures), R&D(불가리아 Nasekomo) 등의 미래 산업을 방어함.
- 공공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대규모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등 높은 재정 승수 효과를 달성함(fi-compass, 2024).
 - ▶ 2020년 말 기준 ERDF 금융수단 약정총액 22.4십억 유로 중 18%인 4.5십억 유로가 자본투자에 집중 투입되어 3,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함.
 - ▶ 프로그램 평균 약정 규모는 2,100만 유로, 최종 수혜자당 평균 투자액은 37만

유로 수준임. 2020년 12월 기준 누적 지급액은 7.6억 유로이며, 2.3십억 유로 이상의 민간 자금을 추가 유발하는 고효율 성과를 거둠.

- ▶ 아울러 용자의 원금 안정성과 자본의 고수익 레버리지를 혼합 설계한 하이브리드 성격의 준자본투자(Quasi-equity)를 적재적소에 배분함.

■ 유럽투자은행(EIB) 및 InvestEU의 레버리지 전략

- EU 농업금융은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 고유 재원을 넘어 유럽투자은행 그룹(EIB Group) 및 인베스트EU(InvestEU)의 예산보증 인프라를 결합하여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레버리지 방식을 극대화함(EIB, 2024).
 - ▶ EIB 그룹은 향후 3년간 30억 유로 규모의 농식품·바이오경제 전용 금융 패키지를 확정하고 최초 서명을 완료함. 본 자금은 청년·신규농 및 여성농에 우선 배정되며 애그테크 사모펀드 조성, 관개공동체 직접 대출, 농촌 기초 인프라 확충에 중점 투입됨.
 - ▶ InvestEU는 EU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예산보증(262억 유로) 인프라로, 총보증액의 약 75%를 핵심 금융기관인 EIB 그룹에 배정함. EIB 그룹은 이를 마중물 삼아 시중은행이 기피하는 고위험·소규모 농업기업에 저리 대출을 집행하며 역내 최소 3,720억 유로의 추가 민간 투자를 유도(약 14배의 레버리지 효과)함.
 - ▶ 대표적 매칭 사례로 루마니아 Agricover Credit에 공급된 2,500만 유로 규모의 EIB 대출이 있으며, InvestEU의 신용 보완을 통해 소규모 농업기업과 청년농 지원에 집중 활용됨.
- 연방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개별 회원국의 EAFRD 금융수단 편성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임(fi-compass, 2025).
 - ▶ 2023-2027 이행 기간 기준 총 13개 회원국만이 11억 유로(순수 EAFRD 재원은 6억 9,200만 유로)의 공공 지출을 금융수단에 편성함. 이는 fi-compass가 추정한 유럽 농업 부문의 실질 금융 격차(197억~466억 유로)에 비해 협소한 예산 배치로, 현장 수요와의 괴리가 큼.
- EU 농가의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여 CAP 2023-2027 프로그램은 청년농 정착을 핵심 타겟으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금융 유도를 지속함.

- ▶ 현재 EU 농가의 평균 연령은 57세이며 40세 미만 경영주 비중은 12%에 불과함. 이에 대응하여 결과지표(R.36) 기준 최대 38만 명의 청년농 정착을 목표로 수립함. 앞서 시행된 2019년 EIB 농업·바이오경제 패키지에서도 청년농 대출 목표(전체의 11%)를 소폭 초과 달성함(European Commission, 2025).
- ▶ EU 집행위원회는 농업 세대교체 전략을 통해 2040년까지 청년농 비중을 24%로 배증하는 목표를 제시함. 농지 접근성·금융·역량 등 5대 지렛대를 중심으로 차기 CAP에 최대 30만 유로 규모의 스타터팩 신설, 청년농 특화 EIB 신규 보증 등을 추진하며 회원국에 농업 예산의 6% 이상을 세대교체에 배정할 것을 권고함.

2.3. 재가·희생 프로그램

- EU는 미국식의 사후적 대출 직접 조정 프로그램 대신, 금융수단과 보조금을 단일 운영(Operation) 내에서 결합하여 차주의 상환 부담을 사전·지속적으로 경감하는 체계를 취함(fi-compass, 2024).
 - ▶ 공동조항규정(CPR) (EU) 2021/1060 제58조(5)에 의거하여 공유관리 기금의 금융수단(대출·보증·자본)과 보조금(Grants)의 결합이 허용됨. 결합 보조금은 해당 금융수단의 투자에 직접 연계되어야 하며 투자가치 미만이어야 함. 2021-2027 회계연도부터는 보조금을 최종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됨.
 - ▶ 과거 2014-2020 기간에는 이자율 보조, 보증수수료 보조, 기술지원 3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2021-2027 지침 개정을 통해 자본 리베이트, 투자보조금, 용자전환형 상품이 추가되어 다각화됨(fi-compass, 2024).
- 2021-2027 회계연도에 신설된 자본 리베이트(Capital Rebate)와 투자 보조 융합 제도는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강력한 사실상의 채무 감면 효과를 유발함.
 - ▶ 최종수혜자가 에너지 효율화 등 사전에 명시된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대출 원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즉시 전환하여 상각(Write-off)하거나 선상환 처리함. 이를 통해 금융중개기관의 신용 노출이 축소되는 동시에, 감액된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상환표(Amortization Schedule)가 동태적으로 재조정되어 차주의 원리금 부담을 영구 차감함. (예: 폴란드는 대출 75% 이상 적기 상환 및 환경 목표 충족 시 최대 10% 리베이트 활성화)
 - ▶ 대출 금리와 보증수수료를 보조금으로 낮춤. 이자율 보조는 통상 100~200bp(1~2%p)

를 인하하되 음(-)의 금리를 초래해서는 안 되며, 민간 자본 접근 조건 개선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됨.

- ▶ 투자비 일부를 직접 보전하는 투자보조금(Investment grant)과 조건 충족 시 대출을 보조금으로 완전히 바꾸는 용자전환형(Forgivable loan)이 가동됨. 프로젝트 준비와 경영 역량을 강화해 주는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 보조금도 간접적인 상환 능력 방어 기제로 병행됨.
- EU의 회생 접근은 철저히 사전적·순환적 효율성에 방점을 두며, 위기 시에도 기존 채권의 사후적 구조조정은 엄격히 제한함(fi-compass, 2024).
 - ▶ 금융수단에 상환·회수된 공공 자금은 적격 기간 종료 후에도 최소 8년간 프로그램 정책 목표에 맞게 재사용(금융수단 또는 기타 지원 형태)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부여되어 보조금 대비 예산의 영속성을 보장함.
 - ▶ 코로나19 등 비상국면 시 슬로바키아의 가교대출 보증(SIH Anti-Corona Guarantee) 같은 단기 유동성 보증을 한시 운영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도 기존 대출의 재융자 및 재구조화는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 명시됨. 다만 오스트리아의 RDI 결합대출처럼 프로젝트 실패 시 대출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주는 용자전환형(Forgivable loan) 메커니즘 등은 미국의 PLS·DBSA식 사후 구제 제도와 기능적으로 일부 수렴하는 양상을 보임.

3. 미국·EU 농업 분야 금융정책 비교·분석

- 미국과 EU의 농업금융 모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한계 농가 보호를 지향함. 다만, 정부의 개입 형태, 재정의 전달 경로, 위기 대응의 사후·사전성 측면에서 뚜렷한 제도적 차별성을 보임.

■ 직접 신용공급 대 보증 레버리지

- 미국은 연방 재정을 통한 직접 신용공급을 주축으로 삼는 반면, EU는 공공 보증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자본을 유입하는 레버리지 확충에 주력함(USDA FSA, 2026; EIB, 2024).

- ▶ 미국은 FSA가 직접대출(2026년 6월 기준 직접 운영대출 5.0%, 농장소유대출 5.875%)을 집행하여 시장 경색기에 농가에 자금을 신속·확실하게 주입하고, 한도 초과분을 보증대출로 보완함.
- ▶ 유럽연합은 EAFRD 자체 직접대출 비중을 낮게 유지하는 대신, InvestEU의 예산보증(262억 유로)을 통해 역내 최소 3,720억 유로의 추가 민간 투자를 유도함. 회수 자금의 재투자(최소 8년 의무)를 통한 순환적 효율성과 민간 자본 동원력에서 강점을 보임.

■ 보편 접근 대 시장실패 표적화

- 미국은 요건 충족 시 보편적인 신용 접근을 보장하는 구조인 반면, EU는 철저히 검증된 시장 경색 영역에만 재정을 투입하는 표적화 전략을 취함.
- ▶ 미국은 타 금융기관 이용 불가(Credit elsewhere) 요건과 가족농 기준만 만족하면 정형화된 가이드라인 아래 누구든 연방 신용망에 진입할 수 있음.
- ▶ 유럽연합은 의무적 사전평가(Ex-ante assessment)를 거쳐 식별된 금융 격차(농업 부문 197억~466억 유로) 영역에만 금융수단을 승인함. 시중 민간 자금을 밀어내는 구축효과(Crowding-out)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이점이 있으나, 설계와 집행 과정의 행정 부담이 가중됨.

[표 5] 미국·EU 농업금융 지원체계 비교

비교 축	미국 (FSA)	EU (CAP/EAFRD)
① 기본 구조	정부 직접 신용공급(프로그램 기반). 한도·금리·자격 법정	회원국 금융수단 편성(기금·레버리지 기반). 사전평가로 설계
② 개입 기준	민간조달 불가(credit elsewhere) 가족농 — 보편 접근	식별된 시장실패에 한정 — 표적 개입
③ 전달 경로	FSA 직접대출 + 상업금융 보증(연방 단일 집행)	관리당국→중개기관 + EIB/InvestEU 레버리지(다층)
④ 신규농 지원	다운페이먼트·마이크로대출·청소년대출 등 정형 수단	CAP 청년농 정착지원 + 금융수단(보증·미소금융)
⑤ 회생·위기	PLS·DSA·긴급대출 등 직접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조금 결합(자본 리베이트·이자보조), 직접 재용자 미운영

■ 신규농 진입금융의 설계

- 두 지역 모두 농업 세대교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있으나, 신용 공급의 직접성과 다층성 측면에서 도구적 차이를 보임(USDA FSA, 2025; European Commission, 2026).
 - ▶ 미국은 다운페이먼트 프로그램(자부담 5%, 2026년 6월 실금리 연 1.875%), 마이크로대출, 청소년대출 등 진입 단계별 특례 상품을 정형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춤.
 - ▶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AP) 결과지표(R.36)에 따라 최대 38만 명의 청년농 정착을 목표로 보증 및 미소금융을 결합함. 다만 최신 세대교체 전략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유럽투자은행(EIB)의 청년농 대출 목표가 전체의 11%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친 점은 보증·레버리지 유도 방식만으로 초기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회생·위기 대응

- 위기 가구 구제에 있어 미국은 사후적·직접적인 채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반면, EU는 사전적·성과연계형 비용 보조 구조를 견지함(USDA FSA, 2026).
 - ▶ 미국은 eDALR 전산 시스템과 합리적 상환계획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 채무의 기간 연장, 통합, 나아가 원금 감면(Write-down)까지 실행하는 정형화된 채무조정서비스(PLS)를 가동함.
 - ▶ 유럽연합은 정부가 직접 기존 채권을 재구조화하거나 재융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음. 대신 공동조항규정(CPR)에 따라 단일 운영 내에서 자본 리베이트(성과 충족 시 원금 일부 상각 및 상환표 재조정), 이자율 보조를 결합하여 차주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함. 성과 충족을 전제로 사실상의 채무 경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구제책과 기능적으로 일부 수렴함.

참고문헌

- 김미복·이명기·김미석·채홍기(2025), 농업경영체의 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R2025-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2026), The 2026 Farm Bill (H.R. 7567): Comparison with Current Law, R48918
- European Commission(2021), Financial Instruments under the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Summaries of Data (2014-2020).
- European Commission(2025), Building the Future of EU Agriculture with Young Farmers in Focus (2025.10.21). https://commission.europa.eu/news-and-media/news/building-future-eu-agriculture-young-farmers-focus-2025-10-21_en; Young Farmers. https://agriculture.ec.europa.eu/common-agricultural-policy/income-support/young-farmers_en
- European Commission(2026), CAP Funds·CAP Strategic Plans (2023-2027, 28개 승인). https://agriculture.ec.europa.eu/common-agricultural-policy/cap-overview_en
- European Investment Bank(EIB)(2024), € 3 billion of EIB Group Financing for Farmers and Bioeconomy (2024.12.). <https://www.eib.org/en/press/all/2024-497-eur3-billion-of-eib-group-financing-announced-for-farmers-and-bioeconomy>; Romania: € 25 million EIB Loan to Agricover Credit (2025.12.). <https://agricover.ro/en/press-releases-media-centre/2025/romanian-farmers-to-get-financing-support-with-25-million-eib-loan-to-agricover-credit>
- farmdoc daily(2025), Impacts of the Commodity Title Changes Under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for Midwestern Farms in 2025, 15(128), University of Illinois.
- fi-compass(2024), ERDF Loans·Guarantees·Equity Factsheets; Combin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Grants (2021)
- fi-compass(2025), Study on Financial Needs in the Agriculture and Agri-food Sectors in 24 EU Member States;
- USDA Farm Service Agency(USDA FSA)(2025), Farm Loan Information Chart (2025.10.). <https://www.fsa.usda.gov/programs-and-services/farm-loan-programs>
- USDA Farm Service Agency(USDA FSA)(2026), USDA Announces June 2026 Lending Rates for Agricultural Producers; USDA Announces 2026 Marketing Assistance Loan Rates; Farm Loan·FSFL·MAL Program Pages. <https://www.fsa.usda.gov/programs-and-services/farm-loan-programs>
- Federal Register(2024.08.08.), Enhancing Program Access and Delivery for Farm Loans (7 CFR Part 766), 89 FR 6502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8/08/2024-16828/enhancing-program-access-and-delivery-for-farm-loans>
- Regulation (EU) 2021/1060 (CPR). <https://eur-lex.europa.eu>

2026 농식품 재정사업 리포트
Agrifood Fiscal Report

Agrifood Fiscal Report



06

경제동향

6 경제동향¹⁾

1. 경제성장

-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대외 수출 및 투자 호조에 힘입어 지출과 생산 부문 전반에서 플러스(+) 성장 기조를 시현함.
- 지출 부문별 전기 대비 성장률은 수출(5.1%) → 설비투자(4.8%) → 건설투자(2.8%) → 민간소비(0.5%) → 정부소비(0.1%) 순임(표 1).
 - ▶ 수출은 반도체 등 IT 주력 품목의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전기 대비 5.1% 증가하며 분기 성장을 견인함.
 - ▶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도입이 일제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 대비 4.8% 증가를 기록하며 높은 회복세를 보임.
 -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 실적이 모두 호전되면서 전기 대비 2.8% 증가하여 반등세로 전환됨.
 - ▶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5%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한 반면,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 확대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1% 증가에 그침.
- 주요 산업별 전기 대비 성장률은 농림어업(4.1%) → 제조업(3.9%) → 서비스업(0.4%) 순임(표 2).
 - ▶ 농림어업은 재배업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4.1%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1) 본 원고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6.04.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6.05.15.)」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05). 『농업농촌경제동향』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 ▶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 주요 IT 업종의 가동률 상승에 따라 전기 대비 3.9%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냄.
- ▶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문화 등의 호조로 전기 대비 0.4% 증가함.
- 서비스업 내 전기 대비 성장률은 문화 및 기타(3.0%) → 금융 및 보험(1.8%) → 도소매 및 숙박음식(0.6%) → 부동산업(0.0%) → 정보통신업(△0.8%) → 운수업(△1.3%) 순으로 나타남.
- ▶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은 대외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3.0% 증가하여 서비스 부문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함.
- ▶ 금융 및 보험업은 자금 수요 및 거래 대금 확대 등으로 전기 대비 1.8% 증가함.
- ▶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은 소비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전기 대비 0.6% 증가함.
- ▶ 부동산업은 거래 둔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기 대비 0.0%를 기록하여 보합세에 머무름.
- ▶ 정보통신업은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 수요 조정으로 전기 대비 △0.8% 감소함.
- ▶ 운수업은 화물 및 여객 수송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1.3% 감소하여 감소 폭이 가장 큼.

[표 1]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24p					2025p					2026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GDP 성장률	2.0	1.2	-0.2	0.1	0.1	1.0	-0.2	0.7	1.3	-0.2	1.7
민간 소비	1.1	0.5	0.0	0.4	0.2	1.3	-0.1	0.5	1.3	0.3	0.5
정부 소비	2.1	0.9	0.8	0.9	0.4	3.0	0.0	1.2	1.3	1.3	0.1
건설투자	-3.3	4.5	-3.3	-3.6	-4.1	-9.8	-3.1	-1.2	0.6	-3.5	2.8
설비투자	1.7	-1.0	0.0	5.4	0.8	2.0	-0.4	-2.1	2.6	-1.7	4.8
수출	6.8	1.3	1.5	0.0	0.6	4.2	-0.6	4.5	2.1	-1.7	5.1
수입	2.5	-0.3	1.6	1.3	0.2	3.8	-1.1	4.2	2.0	-1.5	3.0

주 1) 2024p, 2025p, 2026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임.

3) 2020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6.04.23.),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6.05.26).

[표 2]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24p					2025p					2026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농림어업	0.6	4.1	2.0	0.7	-1.8	1.4	4.4	-1.2	-4.6	4.7	4.1
제조업	4.3	0.9	0.9	0.0	0.1	2.0	-0.6	2.5	1.5	-1.5	3.9
서비스업	1.6	0.6	0.1	0.4	0.3	1.7	-0.2	0.8	1.4	0.6	0.4
(도소매 및 음식숙박)	-1.5	1.8	-1.3	-1.2	-0.3	1.2	0.0	1.7	2.5	-0.6	0.6
(운수업)	8.8	-1.8	3.4	2.8	0.7	2.3	-2.9	2.1	2.6	-1.1	-1.3
(금융 및 보험업)	3.5	2.8	1.2	3.1	0.1	5.3	1.0	0.7	2.2	2.5	1.8
(부동산업)	2.0	0.6	1.5	-1.0	-0.1	0.2	-1.0	0.9	1.1	0.9	0.0
(정보통신업)	0.5	-0.6	-2.9	2.0	1.4	2.1	0.7	-0.8	1.2	0.4	-0.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5	3.1	-0.6	-2.2	-0.1	-0.5	0.8	0.5	0.2	-1.9	3.0

주 1) 2024p, 2025p, 2026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임.

3) 2020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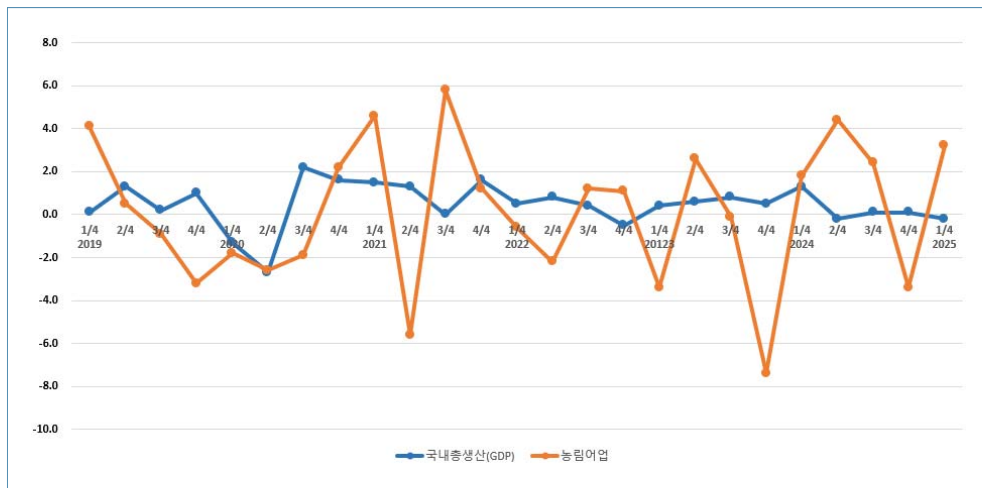
4)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6.04.23.),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6.05.26).

-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92조 5,30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 전기 대비 1.7%를 기록함.
 - ▶ 농림어업 부문의 국내총생산은 8조 9,257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증감률은 전기 전년 동기 대비 2.8%, 전기 대비 4.1%를 기록함.

[그림 1]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2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주: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22년 4/4분기 이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6.05.26).

2. 고용

- 2026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94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23만 1천 명) 증가함.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 동기(63.9%) 대비 0.2%p 상승하여, 노동시장 참여 기반이 소폭 확대됨.
- 2026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8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18만 3천 명) 증가함.
 - ▶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24만 9천 명, 2.2%)과 전기·운수·통신·금융(+7만 6천 명, 2.0%)이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두 부문의 증가가 여타 부문의 감소를 상쇄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함.
 - ▶ 반면 농림어업(-8만 5천 명, -6.9%), 건설업(-2만 6천 명, -1.4%), 광공업(-2만 6천 명, -0.6%), 도소매·숙박음식점업(-6천 명, -0.1%)은 감소함.
- 2026년 1/4분기 실업자 수는 10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4만 9천 명) 증가함. 계절조정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기(2.8%) 대비 0.1%p 상승함.
 - ▶ 경제활동인구 증가분(23만 1천 명)은 취업자 증가(18만 3천 명, 약 79%)와 실업자 증가(4만 9천 명)로 나뉘며, 노동 공급 확대가 취업자 증가만으로 완전히 흡수되지 못해 취업자 증가율(0.6%)을 상회하는 실업자 증가율(5.0%)이 나타남.

[표 3]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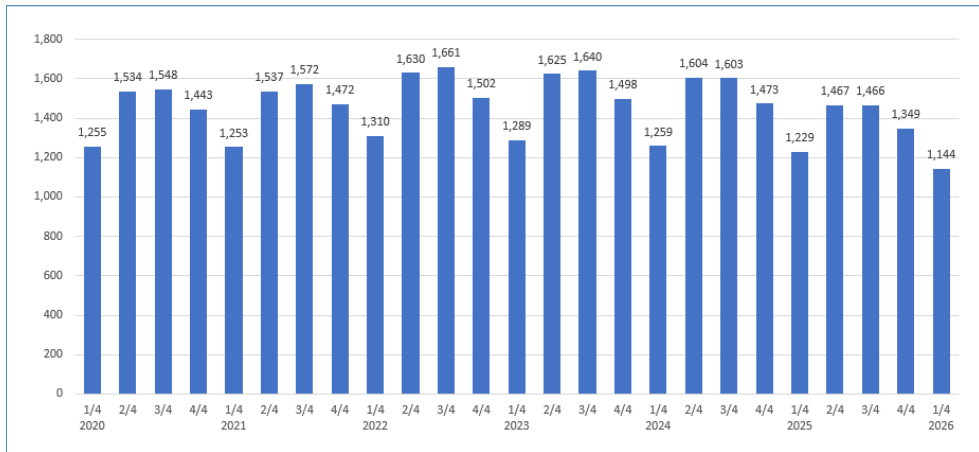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활동인구	29,399	29,599	29,196	29,890	29,700	29,610	29,427	0.8
(경제활동참가율)	64.5	64.7	63.9	65.4	64.9	64.6	64.1	0.2
취업자	28,576	28,769	28,215	29,046	29,050	28,765	28,398	0.6
－ 농림어업	1,485	1,378	1,229	1,467	1,466	1,349	1,144	-6.9
－ 광공업	4,463	4,391	4,405	4,423	4,376	4,361	4,379	-0.6
－ 건설업	2,065	1,940	1,921	1,957	1,935	1,947	1,895	-1.4
－ 도소매·음식숙박업	5,536	5,532	5,527	5,556	5,528	5,519	5,521	-0.1
－ 전기·운수·통신·금융	3,669	3,764	3,710	3,767	3,780	3,798	3,786	2.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1,358	11,764	11,424	11,876	11,964	11,791	11,673	2.2
실업자	823	830	980	844	651	845	1,029	5.0
실업률(계절조정)	2.8	2.8	2.8	2.7	2.7	2.9	2.9	0.1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검색일: 26.05.26).

- 2026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14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8만 5천 명) 감소하여, 감소한 산업 중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함.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도 전년 동기 4.4%에서 4.0%로 0.4%p 하락함.
 - ▶ 분기별로는 2/4분기에 정점을 형성한 후 4/4분기부터 감소하여 1/4분기에 저점을 보이는 계절성을 나타내며, 연간 기준으로는 2024년 148만 5천 명에서 2025년 137만 8천 명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됨.
 - ▶ 한편 동 부문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여, 노동투입 감소에도 산출이 확대되는 산출-고용 괴리가 관찰됨.

[그림 2]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단위: 천 명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검색일: 26.05.26).

3. 소비

- 2026년 1/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5% 증가함. 민간소비는 2025년 1/4분기 감소(-0.1%) 이후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 폭은 2025년 3/4분기(1.3%)를 정점으로 4/4분기 0.3%, 2026년 1/4분기 0.5%로 둔화됨.
- 2026년 3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8% 증가함. 내구재(+9.8%)가 증가를 주도

하였고 준내구재(+0.3%)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내구재(-1.3%)는 감소함.

- ▶ 내구재는 2월 -1.4%에서 3월 +9.8%로 큰 폭 반등하였고, 준내구재도 2월 -5.5%에서 3월 +0.3%로 증가 전환함. 반면 비내구재는 2월 +2.3%에서 3월 -1.3%로 감소 전환함.
- ▶ 분기 기준으로 2026년 1/4분기 소매판매는 전기 대비 2.4% 증가하여, 2025년 4/4분기(0.6%)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됨.
- 2026년 4월 소매 판매의 경우 백화점 카드승인액 및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및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4]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24	2025					2026p	
	연간	연간	1/4	2/4	3/4	4/4p	1/4p	3월p
민 간 소 비	1.1	1.3	-0.1	0.5	1.3	0.3	0.5	-
소 매 판 매	-1.9	0.3	0.6	-0.6	1.2	0.6	2.4	1.8
(내 구 재) ¹⁾	-3.6	3.8	3.7	-1.1	4.8	-3.8	6.5	9.8
(준내구재) ²⁾	-3.0	-2.1	-2.3	-1.0	2.9	0.1	3.0	0.3
(비내구재) ³⁾	-0.8	-0.2	0.1	-0.1	-1.1	2.8	0.4	-1.3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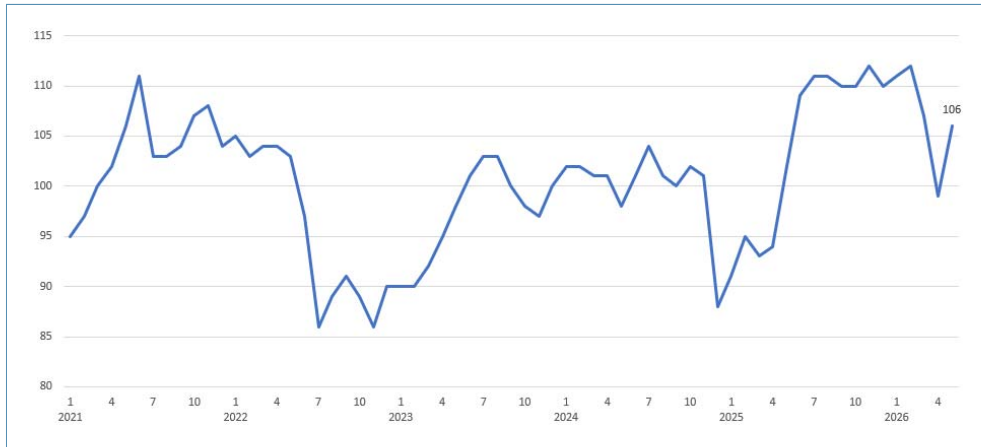
4) 2025년 4/4분기, 2026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2026.05.15.), 「최근경제동향」.

- 2026년 5월 소비자심리지수²⁾는 106으로 전월(99) 대비 7p 상승하며 기준치(100)를 상회함.
 - ▶ 월별로는 1월(111) → 2월(112) → 3월(107) → 4월(99) → 5월(106)으로, 연초 낙관세(111~112)에서 4월 기준치 하회(99) 후 5월 반등하여 다시 100을 상회함.

2)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소비자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동향조사」(검색일: 26.05.27).

4. 물가

- 2026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118.4로 전년 동기 대비 2.1%, 전기 대비 0.9% 상승함.
 - ▶ 품목 성질별로는 서비스(116.0, +2.4%)의 상승률이 상품(121.2, +1.6%)을 상회하여, 서비스 물가가 전체 상승을 주도함.
 - ▶ 상품 중에서는 공업제품(+1.9%)과 농축수산물(+1.2%)이 상승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0.2%)는 전년 동기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함.

[표 5]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구분	2024	2025					2026	증률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총 지 수	114.2	116.6	116.0	116.3	116.7	117.4	118.4	0.9	2.1
상 품	117.2	119.6	119.3	118.9	119.5	120.5	121.2	0.6	1.6
농축수산물	123.1	126.0	126.6	122.9	127.1	127.4	128.2	0.6	1.2
공업 제품	113.9	116.1	115.5	115.8	116.2	116.9	117.7	0.7	1.9
전기·수도·가스	137.1	139.7	140.9	140.9	135.9	140.9	141.1	0.1	0.2
서 비 스	111.6	114.1	113.2	114.1	114.2	114.8	116.0	1.0	2.4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조사」(검색일: 26.05.27).

- 2026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3.1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전기 대비 3.2% 상승함.
 - ▶ 전기 대비로는 모든 부류가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곡물(+15.5%)과 축산물(+10.1%)이 큰 폭 상승한 반면 청과물(-12.6%)은 유일하게 하락하여 부류 간 차별화가 뚜렷함. 특히 재배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청과물(가중치 328.1)의 하락이 총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1.0%)을 제약함.
- 2026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4.4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전기 대비 1.1% 상승함.
 - ▶ 전년 동기 대비로는 모든 부류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자산구입비(+10.5%)의 상승이 두드러짐. 전기 대비로는 노무비(-0.5%)와 경비(-1.7%)가 하락하였으나, 자산구입비(+5.7%)·재료비(+1.7%) 등의 상승으로 총지수는 상승함.
- 2026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9.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하락하였으나, 전기 대비 2.0% 상승함.
 - ▶ 전년 동기 대비로는 판매가격 상승률이 구입가격 상승률을 밑돌아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기준치(100)를 하회함(2025년 1/4분기 100.7 → 2026년 1/4분기 99.0). 이는 농가의 실질 채산성이 전년 동기보다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반면 전기 대비로는 판매가격 상승률이 구입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여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단기적으로는 회복 흐름이 나타남.

[표 6] 농업교역조건 지수(2020=100)

	구분	가중치	2025					2026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농가 판매 가격 지수(A)	총지수	1,000.0	119.1	121.9	118.1	119.9	119.3	123.1	1.0	3.2
	곡물	188.8	107.2	97.3	108.6	111.5	109.9	112.4	15.5	2.3
	청과물	328.1	129.7	147.0	125.2	128.2	126.4	128.5	-12.6	1.7
	축산물	383.4	113.7	107.1	114.6	117.3	115.9	117.9	10.1	1.7
	기타농산물	99.7	127.7	142.6	126.0	118.2	127.1	146.1	2.5	14.9
농가 구입 가격 지수(B)	총지수	1,000.0	121.6	121.1	121.0	121.4	123.0	124.4	2.7	1.1
	가계용품	471.8	116.6	116.1	116.3	116.7	117.4	118.6	2.2	1.0
	재료비	243.6	129.8	129.6	129.6	130.1	130.1	132.3	2.1	1.7
	노무비	50.2	137.9	136.1	137.9	138.3	139.3	138.6	1.8	-0.5
	경비	133.1	130.2	130.8	127.3	127.4	135.2	132.9	1.6	-1.7
	자산구입비	101.3	106.0	103.5	106.1	106.3	108.2	114.4	10.5	5.7
농가교역조건(A/BX100)			97.9	100.7	97.6	98.8	97.0	99.0	-1.7	2.0

자료: 국가데이터,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검색일: 26.05.27).

5. 수출입

- 2026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56.8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전기 대비 13.5% 상승함.
 - ▶ 비중이 큰 공산품(156.9, +16.1%)이 총지수와 거의 동일한 폭으로 움직이며 상승을 주도하였고, 농림수산물(123.1, +11.3%)도 상승함.
 - ▶ 반면 농산물(84.2, -11.5%)은 하락하여 품목 간 차별화가 나타남.
- 2026년 1/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53.9로 전년 동기 대비 7.0%, 전기 대비 9.3% 상승함.
 - ▶ 공산품(137.7, +6.3%)이 상승을 주도하였고 농림수산물(144.8, +0.6%)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농산물(154.6, -6.6%)은 하락함.
 - ▶ 수출물가 상승률(+16.1%)이 수입물가(+7.0%)를 크게 상회함.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표시 가격 동반 상승에 더해, 반도체 등 공산품 수출가격 강세가 가세한 결과로 해석됨.
- 2026년 4월 수출물가지수는 187.4로 원/달러 환율 상승과 컴퓨터·전자·광학기 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7.1%, 전년 동월 대비 40.8% 상승함. 수입물가지수는 168.1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3%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2% 상승함.

[표 기] 부문별 수출·입 물가지수(2015=100)

구분		2024	2025					2026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수출	총 지 수	129.9	132.8	135.0	129.4	128.6	138.1	156.8	16.1	13.5
	농림수산물	105.2	112.8	110.6	109.2	113.0	118.4	123.1	11.3	4.0
	농 산 물	88.9	93.1	95.2	94.8	91.5	90.8	84.2	-11.5	-7.3
	공 산 품	130.0	132.9	135.1	129.5	128.7	138.2	156.9	16.1	13.5
수입	총 지 수	139.6	139.0	143.9	136.1	135.2	140.8	153.9	7.0	9.3
	농림수산물	130.7	139.5	144.0	137.4	134.4	142.2	144.8	0.6	1.8
	농 산 물	145.7	154.5	165.4	152.7	145.7	154.4	154.6	-6.6	0.1
	공 산 품	124.6	127.4	129.5	125.3	124.1	130.6	137.7	6.3	5.4

자료: 국가데이터처, 「수출입물가조사」(검색일: 26.05.27).

- 2026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105만 2천 톤(전년 동기 대비 +0.4%, 전기 대비 -5.0%), 수출액은 25억 3,7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3.7%, 전기 대비 -1.4%)임.
 - ▶ 부류별로는 농산물(물량 +4.9%, 금액 +6.7%)이 증가를 주도하였고, 임산물은 물량은 소폭 감소(-1.1%)하였으나 금액은 증가(+15.8%)함. 반면 축산물은 물량(-30.8%)과 금액(-29.3%) 모두 큰 폭 감소함.
- 2026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259만 2천 톤(전년 동기 대비 -1.8%, 전기 대비 -2.7%), 수입액은 110억 9,1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5.7%, 전기 대비 +8.9%)임.
 - ▶ 부류별로는 농산물이 물량은 보합(+0.3%)이나 금액은 증가(+2.4%)하였고, 축산물은 물량(+18.1%)과 금액(+21.4%) 모두 큰 폭 증가함. 임산물은 물량(-10.0%)과 금액(-7.9%) 모두 감소함.
 - ▶ 전체 수입은 물량이 감소(-1.8%)하였음에도 금액은 증가(+5.7%)하여, 평균 수입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축산물은 수출이 물량·금액 모두 30% 안팎 감소한 반면 수입은 18~21% 증가하여 대조적인 흐름을 보임. 그 결과 2026년 1/4분기 농림축산물 무역수지는 85억 5,4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80억 4,500만 달러 적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됨.

[표 8] 농림축산물 부문별 수출·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25								2026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4		2/4		3/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농림축산물	1,048	2,446	1,197	2,627	1,190	2,597	1,107	2,574	1,052	2,537	0.4	3.7
	농산물	777	2,135	893	2,303	934	2,289	845	2,258	815	2,279	4.9	6.7
	축산물	106	225	125	221	96	196	110	209	73	159	-30.8	-29.3
	임산물	165	85	179	103	159	112	152	108	164	99	-1.1	15.8
수입	농림축산물	12,816	10,491	13,537	11,183	12,979	11,064	12,938	10,181	12,592	11,091	-1.8	5.7
	농산물	8,760	6,319	9,448	6,972	9,023	6,719	9,131	6,450	8,787	6,469	0.3	2.4
	축산물	550	2,663	557	2,690	542	2,920	499	2,344	649	3,232	18.1	21.4
	임산물	3,507	1,509	3,532	1,521	3,414	1,426	3,307	1,387	3,155	1,389	-10.0	-7.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 (검색일: 26.05.29).

7. 금융·환율

- 2026년 들어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함. 국고채(3년)는 1월 3.0%에서 5월 3.7%로 0.7%p, 회사채(3년, AA-)는 3.5%에서 4.3%로 0.8%p 상승함. CD(91일)는 2.8% 내외에서 안정되었고, 무담보콜금리(1일)는 2.5%로 전 기간 동결됨.
 - ▶ 정책금리에 연동되는 콜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장기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국고채(3년)와 콜금리 간 금리차가 1월 0.5%p에서 5월 1.2%p로 확대됨. 회사채·국고채 간 신용스프레드도 0.5%p에서 0.6%p로 소폭 확대됨.
 - ▶ 국고채 금리는 미국-이란 휴전 합의 기대 등으로 일시 하락한 뒤, 4월 하순 이후 종전 협상 지연, 한국 1분기 GDP 호조,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반등하는 일별 변동을 보였으나, 월평균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짐.

[표 9] 금리동향

단위: 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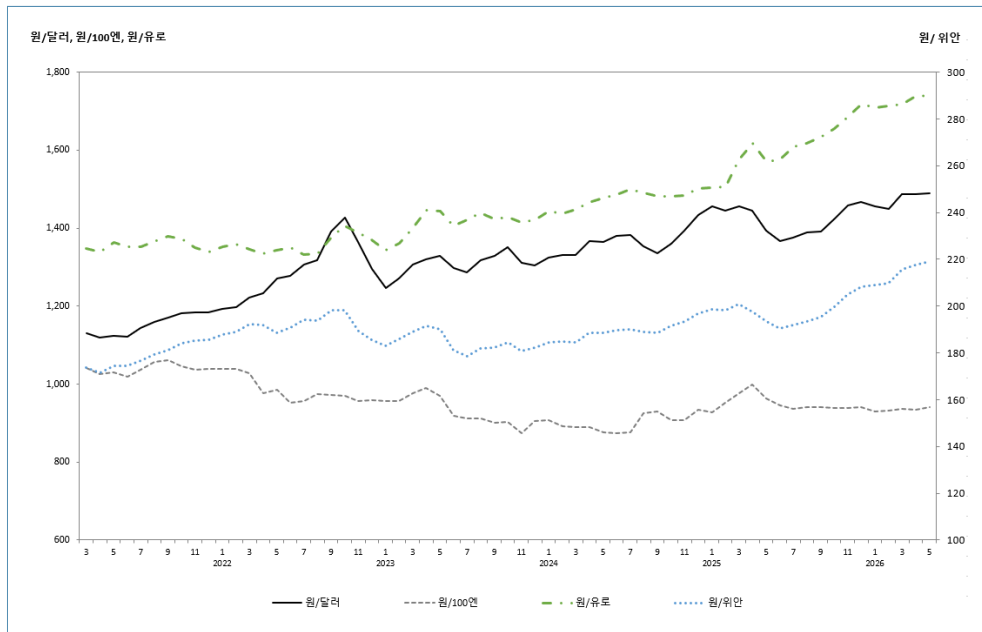
구분	2025							2026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국고채(3년)	2.4	2.5	2.4	2.5	2.6	2.9	3.0	3.0	3.2	3.4	3.4	3.7
회사채	3.0	3.0	2.9	2.9	3.0	3.3	3.5	3.5	3.7	4.0	4.1	4.3
CD유통수익률(91일)	2.6	2.5	2.5	2.6	2.6	2.7	2.8	2.7	2.8	2.8	2.8	2.8
콜금리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주: 회사채는 회사채(3년, AA-), 콜금리는 무담보콜금리(1일, 중개거래)의 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검색일: 26.06.01).

- 2026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1,465원으로 전기 대비 1.0% 상승함.
 - ▶ 4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란 종전 협상 진전 기대와 엔화 강세 등으로 1,45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종전 기대 축소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등으로 하락 폭이 축소됨.
- 2026년 1/4분기 원/유로 환율과 원/위안 환율은 각각 1,714원, 212원으로 전기 대비 1.5%, 3.4% 상승한 반면, 원/100엔 환율은 933원으로 전기 대비 0.8% 하락함.
 - ▶ 달러·유로·위안에 대해서는 원화가 약세(환율 상승)를,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환율 하락)를 보여 통화별로 차별화됨.

[그림 4] 환율 동향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검색일: 26.06.01).

Agrifood Fiscal Report



07

경제전망

7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¹⁾

■ 세계경제성장률

- 2026년 세계경제는 AI 투자의 견조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발 국제 원자재 공급 차질의 여파로 성장세가 2025년 3.4%에서 2.9%로 둔화될 전망이다.
 - ▶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AI 활용 영역 확장과 주요 빅테크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확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 다만, 전장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리스크와 고물가 압력에 직면함.
 - ▶ 또한 중동 지역 인프라 파괴에 따른 에너지 생산 제약과 각국의 원유 재비축 수요 등을 고려하면, 국제유가의 단기적 안정화도 기대하기 어려움.
- (미국) 견조한 AI 투자에도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2026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2월 기준 2.3%)보다 낮은 2.1%로 전망됨.
 - ▶ 2026년 1분기에는 기업의 AI 관련 자본지출 확대로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연방 정부 섣다른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정부지출이 크게 늘며 반등하였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세에 따른 물가 압력으로 증가 폭이 제한됨.
- (유로존)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6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2월 기준 1.2%)보다 약화된 0.8%로 전망됨.
 - ▶ 2026년 1분기 유로존 경제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소비와 서비스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둔화됨.

1) 한국은행 (2026.05). 『경제전망 Indigo Book』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중국) 에너지 충격에 대한 완충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2026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4.6%로 전망됨.
 - ▶ 원유 등 원자재의 막대한 비축량이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을 완충하는 가운데,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중국산 반도체·컴퓨터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일본) 수출 호조에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며 성장 흐름이 약화되어, 2026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5%로 전망됨.
 - ▶ 2026년 1분기에는 반도체·AI 관련 설비투자와 수출이 확대되고, 명목임금 상승과 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물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다만 향후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1] 세계 경제성장률 동향과 전망

단위: %

구 분	2025	2026 (전망)			2027 (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	3.4	2.9	2.9	2.9	3.0	3.1	3.1
미국	2.1	2.4	1.7	2.1	2.0	2.0	2.0
유로	1.4	0.8	0.7	0.8	1.0	1.3	1.2
중국	5.0	4.7	4.5	4.6	4.3	4.3	4.3
일본	1.1	0.1	1.0	0.5	0.5	0.8	0.7

자료: 한국은행(2026.05) 『경제전망 Indigo Book』.

■ 국제유가

- 국제유가(브렌트유)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폐쇄의 영향으로 2026년 배럴당 93달러로 전망됨. 이는 2025년(68달러) 대비 약 37% 높은 수준으로, 공급 차질이 본격 반영된 결과임.
 - ▶ 2026년 중에는 상반기 91달러에서 하반기 95달러로 상승하여 공급 차질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 ▶ 2027년에는 호르무즈 통항량 회복으로 80달러까지 점차 하락하겠으나, 인프라 복구와 각국의 재비축 수요 증가 등으로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국제 원유(브렌트유) 가격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25	2026 (전망)			2027(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68	91	95	93	80

자료: 한국은행(2026.05) 『경제전망 Indigo Book』.

2. 한국경제 전망2)

- (경제성장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공급충격을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6년 경제성장률은 2월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2.6%로 전망됨(상반기 3.3% → 하반기 2.0%의 상고하저).
 - ▶ (민간소비) 1분기에는 소비심리 호조와 주식 자산효과 등에 힘입어 고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재화 소비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임. 이후에도 증시 호조와 추경 등을 바탕으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며, 2026년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 ▶ (건설투자)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건설투자는 부진하겠으나, 견조한 AI 관련 투자와 SOC 확대 등이 하락세를 제한하여 2026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2025년 -9.8%에서 증가 전환).
 - ▶ (설비투자) 반도체 장비와 데이터센터용 GPU 등 AI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2026년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4.4% 증가할 전망이다.
 - ▶ (재화수출) AI데이터센터 메모리 탑재 증가에 따라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크게 확대 되었으며 호조세가 이후에도 이어져 2026년 재화수출은 전년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시장) 부정적 대외 여건을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정책과 내수 개선 흐름 등이 상쇄하여 2026년 실업률은 2.8%로 전망됨.

2) 한국은행 (2026.05). 『경제전망 Indigo Book』 (2월 전망과 비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소비자물가) 2026년 소비자물가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지원으로 상승압력이 일부 완화되겠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2.7% 상승할 전망이다(상반기 2.5% → 하반기 3.0%로 가속).
- (경상수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재·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겠으나, 견조한 반도체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2026년 경상수지는 전년(1,231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한 2,500억 달러로 전망됨.

[표 3] 한국경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25	2026(전망)			2027 (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	1.0	3.3	2.0	2.6	1.6	2.6	2.1
민간소비	1.3	2.6	1.5	2.0	1.8	2.3	2.1
건설투자	-9.8	-0.4	1.6	0.6	1.3	1.7	1.5
설비투자	2.0	4.4	4.3	4.4	2.6	2.8	2.7
재화수출	3.2	7.5	2.4	4.9	1.2	5.3	3.3
재화수입	1.9	3.9	2.1	3.0	3.7	3.4	3.5
고용(실업률)	2.8	3.1	2.6	2.8	3.0	2.6	2.8
소비자물가	2.1	2.5	3.0	2.7	2.4	2.1	2.3
경상수지(억 달러)	1,231	1,515	985	2,500	1,108	792	1,900

주: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2026.05) 『경제전망 Indigo Book』.

3. 농업 전망3)

■ 농업생산액

- (농업생산액) 2026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0%, 평년 대비 6.9% 증가한 63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됨. 재배업(+2.1%)이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축잡업(-0.5%)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업전망 2026」의 내용을 정리함.

- (재배업) 2026년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1%, 평년 대비 10.0% 증가한 38조 원으로 전망됨.
 - ▶ 식량작물 생산액은 쌀 가격 상승과 콩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 평년 대비 4.2% 증가한 10.9조 원으로 전망됨.
 - ▶ 채소 생산액은 작황 회복에 따른 가격 안정으로 전년 대비 1.6%, 평년 대비 11.7% 증가한 14.9조 원으로 전망됨.
 - ▶ 과실 생산액은 2025년산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3%, 평년 대비 30.1% 증가한 8.2조 원으로 전망됨.
- (축잡업) 2026년 축잡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25.4조 원으로, 평년 대비로는 4.5% 증가한 수준임.
 - ▶ 우제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7.4조 원으로, 평년 대비 3.0% 증가한 수준임.
 - ▶ 가금류 생산액은 전년 대비 1.4%, 평년 대비 13.2% 증가한 7.2조 원으로 전망됨.

[표 4] 농업 부문 생산액(명목) 전망

단위: 천억 원, %

구 분	평년 ¹⁾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농업 총생산액 ²⁾	593	608	627	634	3.2	6.9	1.0
재배업 ²⁾	345	367	372	380	1.4	10.0	2.1
식량작물 ²⁾	104	101	107	109	6.3	4.2	1.5
채소류	133	148	147	149	-1.2	11.7	1.6
과실류	63	78	80	82	2.5	30.1	2.3
축잡업	243	241	255	254	6.1	4.5	-0.5
우제류 ³⁾	169	165	177	174	7.1	3.0	-1.4
가금류 ⁴⁾	63	67	71	72	4.9	13.2	1.4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2) 우제류는 한우, 젓소, 돼지의 합이며, 한우는 당해연도 4분기 자료, 돼지는 연평균 자료를 사용함.

3) 가금류는 육용계, 산란계, 오리 등의 합이며, 연평균 자료를 사용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농업경영비 및 농가소득

- (농업총수입) 2026년 호당 농업총수입은 생산액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 평년 대비 4.9% 증가한 3,850만 원으로 전망됨.
- (농업경영비) 2026년 호당 농업경영비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큰 폭 하락으로 영농광열비 등 투입재 가격이 내리면서, 전년 대비 0.7% 감소한 2,780만 원으로 전망됨. 다만 평년 대비로는 9.4% 높은 수준임.
 - ▶ 이에 따라 호당 농업경영비 비중은 72.1%로 전년 대비 1.2%p 하락할 전망이다.

[표 5] 호당 농업경영비(명목) 전망

단위: 십만 원, %

구 분	평년 ¹⁾	2024	2025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농업총수입	367	368	381	385	3.5	4.9	1.0
농업경영비	254	273	279	278	2.5	9.4	-0.7
농업경영비 비중	70.1	74.0	73.3	72.1	-0.7%p	2.0%p	-1.2%p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농가소득) 2026년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8%, 평년 대비 10.7% 증가한 5,330만 원으로 전망됨.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농외소득은 거의 정체됨.
 - ▶ (농업소득) 농업소득은 총수입 증가와 경영비 감소가 맞물려 전년 대비 5.6% 증가한 1,070만 원으로 전망되나, 평년 대비로는 1.0% 낮은 수준임.
 - ▶ (농외소득) 농외소득은 농촌관광 등 농촌경제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전년 대비 0.3%, 평년 대비 6.6% 증가한 2,030만 원으로 전망됨.
 - ▶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공익직불금 등 정책 지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6%, 평년 대비 25.7% 증가한 1,980만 원으로 전망됨.
 - ▶ (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 평년 대비 6.5% 증가한 250만 원으로 전망됨.

[표 6] 호당 농가소득(명목) 전망

단위: 십만 원, %

구 분	평년 ¹⁾	2024	2025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농가소득	482	506	519	533	2.5	10.7	2.8
농업소득	108	96	102	107	6.2	-1.0	5.6
농외소득	190	201	202	203	0.4	6.6	0.3
이전소득	157	182	189	198	3.8	25.7	4.6
비경상소득	24	26	25	25	-3.4	6.5	-1.6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농축산물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 (농축산물 무역수지) 2026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0.6% 감소하고 수출액은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4.0% 감소한 261억 3,040만 달러로 전망됨. 적자 폭이 축소되나 여전히 260억 달러를 웃도는 대규모 적자가 지속됨.
 - ▶ (수입) 미국산 소고기 공급 감소와 지육가격 상승 등으로 축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할 전망이다. 채소와 과일은 2025년 할당관세·TRQ 적용에 따른 기저효과로 각각 8.9%, 1.3% 감소하겠으나, 곡물은 소폭(0.3%) 증가할 전망이다.
 - ▶ (수출) K-Food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에 힘입어, 2026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107억 3,160만 달러로 전망됨(임산물 포함 시 111억 7,610만 달러 수준).

[표 7] 농축산물 무역 동향 및 전망¹⁾

단위: 억 달러, 만 톤, %

구 분	평년 ²⁾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수입액(A)	361.7	366.0	370.8	368.6	1.3	1.9	-0.6
수입량	3,828	3,853	3,869	3,728	0.4	-2.6	-3.7
7대 곡물 ³⁾	1,768	1,810	1,792	1,797	-1.0	1.7	0.3
5대 채소 ⁴⁾	32	37	39	36	5.6	9.6	-8.9
과일	71	82	76	75	-6.4	5.7	-1.3
6대 과일 ⁵⁾	4	3	3	3	-10.2	-20.2	1.6
오렌지·열대과일 ⁶⁾	67	78	73	72	-6.2	7.8	-1.4
5대 축산물 ⁷⁾	128	131	140	136	6.8	6.8	-3.0
수출액(B) ⁸⁾	83.4	94.1	98.4	107.3	4.6	28.6	9.0
	(88.0)	(98.3)	(102.5)	(111.8)	(4.3)	(27.0)	(9.0)
수출량	341	374	389	402	4.0	18.0	3.4
무역수지적자(A - B)	274.6	271.9	272.3	261.3	0.1	-4.9	-4.0

주 1) 임산물(목재류와 산림부산물)을 제외한 농식품 무역 자료임.

2)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3) 7대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4) 5대 채소(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는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5) 6대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은 품목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6) 5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낙농품) 및 오렌지·열대과일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7) ()는 임산물 수출액 전망치를 포함한 수출액임.

자료: GTI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농지면적과 사육 규모

- (경지면적) 2026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149.8만 ha로 전망됨. 감소세는 이어지나 감소 폭은 평년 대비(-2.0%)보다 둔화됨.
 - ▶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55ha로 전년과 유사하며,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77ha로 전년 대비 1.8% 증가할 전망이다. 경지면적 총량은 줄어드나 농가 호수·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여 호당·인구당 면적은 유지·증가함.
 - ▶ 재배면적 감소 폭이 경작가능면적 감소 폭보다 커, 경지이용률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한 107.5%로 전망됨.
- (재배면적) 2026년 재배면적은 식량작물은 증가하였으나 채소·과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0.4% 감소한 156.5만 ha로 전망됨.
 - ▶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88만 ha로 전년 대비 0.2% 증가할 전망이다.

- ▶ 채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24.4만 ha로, 과채류(+1.1%)를 제외한
엽채류·근채류·조미채소 전 부류에서 감소(특히 근채류 -5.9%)할 전망이다.
- ▶ 과수 재배면적은 품종 전환·신규 식재, 고목 갱신 등으로 유목면적은 증가하나
성목면적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0.7% 감소한 15.5만 ha로 전망됨.

[표 8]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전망

단위: 천 ha, %

구 분	평년 ¹⁾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경지면적 ²⁾ (천 ha)	1,529 (1,493)	1,505 (1,460)	1,500 (1,455)	1,498 (1,454)	-0.3	-2.0	-0.1
농가호당 경지면적(ha)	1.51	1.55	1.55	1.55	0.1	3.1	0.5
농가인구당 경지면적(a)	0.71	0.75	0.76	0.77	0.8	8.6	1.8
재배면적(천 ha)	1,608	1,591	1,571	1,565	-1.3	-2.7	-0.4
경지이용률 ³⁾ (%)	106.8	107.6	107.6	107.5	0.0%p	0.7%p	-0.1%p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2) ()는 경작가능면적(천 ha)을 의미함.

3) 경지이용률은 전년도 경작가능면적에 대한 당해 작물재배면적의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표 9] 부류별 재배면적 전망¹⁾

단위: 천 ha, %

구 분	평년 ¹⁾	2024	2025 (추정)	2026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전체 재배면적	1,608	1,591	1,571	1,565	-1.3	-2.7	-0.4
식량작물	901	895	878	880	-1.9	-2.4	0.2
채소	250	246	248	244	0.5	-2.4	-1.3
엽채류	46	46	50	49	9.6	7.8	-1.9
근채류	23	22	21	20	-3.5	-13.6	-5.9
조미채소	91	91	90	87	-1.7	-4.4	-3.2
과채류	41	41	42	43	1.7	4.5	1.1
과수	157	157	156	155	-0.3	-1.1	-0.7

주 1) 국가데이터처의 농산물 부류별 재배면적 작성 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함.

2)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업면적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가축 사육마릿수) 2026년 가축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3% 감소한 1억 9,760만 마리로 전망됨. 우제류와 가금류 모두 소폭 감소하며, 전체의 92.6%를 차지하는 가금류가 사육 마릿수 변동을 주도함.
- (우제류) 소 사육 마릿수는 감소하나 번식용 씨돼지 증가로 돼지 사육 마릿수가 늘어, 우제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1,460만 마리로 전망됨.
- (가금류) 2026년 육용종계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고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 대비에 따른 입식이 감소해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1억 8,300만 마리로 전망됨.

[표 10] 사육 마릿수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마릿수, %

구 분	평년 ¹⁾	2023	2024 (추정)	2025 (전망)	연평균 변화율(%)		
					25/24	26/평년	26/25
총 사육마릿수	192.9	196.5	198.3	197.6	0.9	2.4	-0.3
우제류 ²⁾	15.1	14.9	14.6	14.6	-1.9	-3.5	-0.1
가금류 ³⁾	177.7	181.6	183.7	183.0	1.1	3.0	-0.4

주 1) 평년은 2020~2024년 절사평균을 의미함.

2) 우제류는 한육우, 젖소, 돼지의 합이며, 한육우는 당해연도 4분기, 돼지는 연평균 자료를 사용함.

3) 가금류는 육용계, 산란계, 오리 등의 합이며, 연평균 자료를 사용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축동향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Agrifood Fiscal Report



참고

2026년도 농식품부 사업 부문 분류표

참고

2026년도 농식품부 사업 부문 분류표

사업유형(신)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6예산안 (백만원)
국제협력협상	국제협력협상	국제농업협력(ODA)	114,151
		농업협상대응	2,451
		국제기구분담금	3,409
		국제기구분담금(ODA)	30,327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2,710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옹자)	6,000
농가경영안정	경영회생지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옹자)	182,400
	농가소득보전(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29,661
		직불제이행점검	30,690
		공익기능증진직불	2,969,914
		사업관리비	11,465
	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	재보험금	50,000
	농업기계장비	농기계임대(자율)	23,350
		농기계임대	550
	농업기계장비(세종)	농기계임대(세종)	100
	농업기계장비(제주)	농기계임대(제주)	850
	농업기계정비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	2,599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10,123
	농업정책보험(구조계정)	농업재해보험	887,089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지원	99,093
	농업정책보험(농촌계정)	농업인안전재해보험	95,636
	재해대책	재해대책비	250,000
	정책금융보험관리	농업자금이차보전	729,661
		농업정책보험금응원 기관운영비 지원	8,899
	직접피해지원(FTA기금)	피해보전직불	18,0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3,190
농림축산검역/ 축산방역/ 축산물안전	가축검역(농특)	가축방역	30,672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742
		가축방역대응지원	96,810
		살처분보상금	69,640
		가축사체처리지원	5,051
		가축백신지원	55,569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1,367

사업유형(신)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6예산안 (백만원)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옹자)	6,624
	가축방역(축발)	가축위생방역지원	67,298
	검역검사(R&D)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44,778
	검역검사정보화(정보화)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14,843
	동축산물검역검사	동축산물검역검사	15,137
		축산식품안전관리	2,161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26,834
	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20,762
		축산물HACCP지원	2,519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	농산물가격안정및수급조절(농안기금)	축산물품질관리(축발)	59,773
		비축지원	898,394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4,248
		자조금지원	16,045
	농산물소비활성화및식생활개선	농업관측	19,249
		어린이 과일간식	17,030
	농산물소비활성화및식생활개선(농안기금)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1,276
	농산물소비활성화및식생활개선(농특)	농식품바우처	73,991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도매유통활성화지원	1,540
		산지유통종합자금(옹자)	320,310
		도매유통활성화지원(옹자)	146,000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옹자)	7,234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5,795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46,477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30,387
		화훼산업진흥지역육성(시범)	1,000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25,879
		농산물안전생산공급지원	32,559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5,067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5,497
	소비자유통활성화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옹자)	39,500
		과수 생산유통지원(옹자)	27,277
	원예산업경쟁력강화(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	63,474
		원예시설현대화	5,172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17,870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11,270
농산물품질관리	농산물안전성관리	농산물안전성조사	25,500
		LMO 및 농산물표시관리	4,656
		농산물원산지관리	18,307
		농업경영체등록	31,983
	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농업경영체등록	31,983
		농산물품질관리정보화(정보화)	6,056
농업신산업육성	농기자재산업육성	농산업수출활성화	11,409

사업유형(신)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6예산안 (백만원)
	농기자재산업육성(FTA기금)	종자산업기반구축	9,621
	농생명자원사업육성	도시농업활성화	919
	농식품기술개발(농특)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R&D)	12,461
		기술사업화지원(R&D)	24,396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2,161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17,808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R&D)	5,85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 관리비(R&D)	5,892
		발농업기계화촉진기술개발(R&D)	2,925
		국제협력기반수출농업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5,725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현연구인력양성 (R&D)	6,000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 구축(R&D)	3,317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	8,340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 기술개발(R&D)	10,375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R&D)	8,200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국산화 기술개발(R&D)	8,500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9,275
		기후변화대응지능농업기반관리 기술개발(R&D)	7,063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R&D)	2,000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 개발(R&D)	6,975
		첨단바이오기술기반수요연계형그린 바이오소재산업화기술개발(R&D)	6,900
		합성화학기반K-신작물보호제글로벌 산업화(R&D)	1,500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 기술개발(R&D)	3,000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원료 공급망대응기술개발(R&D)	6,000
		반려동물난치성질환극복기술개발(R&D)	2,775
		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술개발(R&D)	1,575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4,250
	농업신재생에너지보급(투자계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6,837
	농업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5,416
		기후변화실태조사	1,583

사업유형(신)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6예산안 (백만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895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	5,000
	스마트농업육성	국가농업AX플랫폼	70,500
		시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농업)	67,500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	200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4,830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10,185
		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표준확산지원	3,277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9,160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	8,012
		노지 스마트농업 ICT 융복합 확산	10,300
		ICT융복합및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	9,823
		스마트팜 실증단지(자율)	4,610
		임대형 스마트팜(자율)	28,500
		스마트팜 실증단지(지원)	2,021
		임대형 스마트팜(지원)	3,000
	친환경농업인프라구축(지특)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5,642
	친환경농자재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자율)	12,249
		친환경농자재지원(자율)	64,961
		친환경농자재지원	285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지원)	1,145
		친환경농자재지원(세종)	182
	친환경농자재(제주)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제주)	120
		친환경농자재지원(제주)	384
농업 인력 육성 및 창업지원	귀농귀촌활성화지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7,232
		귀농귀촌활성화지원(정보화)	1,940
	농식품창업지원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30,350
		농식품모태펀드출자	70,000
	농업인교육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30,502
		영농아카데미	15,897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고용인력지원	39,916
	농촌정착지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자율)	96,118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1,217
	농촌정착지원(세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세종)	505
	농촌정착지원(제주)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제주)	4,461
	맞춤형농지지원(농지기금)	맞춤형농지지원(융자)	1,807,690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38,308
농촌복지	경제활성화	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책임운영)	28,431
		전공심화과정운영(책임,수입대체)	315
		한국농수산대학교정보화(정보화)	1,732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자율)	33,400

사업유형(신)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6예산안 (백만원)
및 지역 활성화	농가소득안정(복지)(농지기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37
		농지연금(용자)	276,629
	농촌공간및정주여건개선	농지이용관리지원	13,944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163,715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4,555
	농촌복지증진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2,270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25,926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341,351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9,640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농촌경제활성화지원(제주)	749
		농촌경제활성화지원(자율)	10,764
		농촌경제활성화지원(지원)	11,767
		국립농업박물관운영	17,310
	농촌일자리 및 경제활성화(세종)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716
	농촌일자리 및 경제활성화(제주)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697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제주)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0,698
	농촌지역개발(자율)	농촌형교통모델(자율)	28,991
	농촌형교통모델	일반농산어촌개발	493,753
	일반농산어촌개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30,380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세종)	593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농촌경제활성화지원(세종)	177
생산기반	농어촌공사시설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	156,078
	농업시설개선(농특)	농촌용수관리	49,270
		수리시설개보수	747,803
	다목적 용수개발	농촌용수개발	209,745
	대단위농업개발 및 시설정비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13,250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대단위농업개발(농지)	90,300
		새만금지구개발	176,000
	재해예방(농특)	가뭄대비용수개발	11,082
식품외식 산업육성	농식품 글로벌 진출 확대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76,538
		배수개선	641,051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63,602
		농식품 시장 개척	4,685
	농식품수출촉진(농안)	농식품 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11,944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751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용자)	510,000
	식품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R&D)	38,887
	식품산업기반조성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5,025
	식품산업육성	기능성식품산업육성	3,124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7,986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	14,476

사업유형(신)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6예산안 (백만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자율)	1,150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자율)	21,509
		전통발효식품육성(자율)	10,775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지원)	3,165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	8,168
	식품산업육성(농안)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43,368
	식품산업육성(제주)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제주)	700
		전통발효식품육성(제주)	9
	한식및외식산업육성	직장인 든든한 한끼	7,948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3,598
		푸드서비스 선진화	2,486
양곡 및 종자 관리	식량생산유통지원	전략작물산업화	56,361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8,725
	양곡매입 및 관리	정부양곡매입비	1,600,409
		수입양곡대	548,214
		정부양곡관리비	449,499
		쌀소비가반구축	13,606
	종자산업육성(농특)	시설현대화및품질관리(종자원)	8,512
		품종심사및재배시험	6,449
		원원종및원종생산	6,328
		종자산업활성화지원	10,348
		과수무병목목생산공급지원	3,131
	종자수급조절	종자수매.공급	68,543
	종자원정보화(정보화)	종자원정보화(정보화)	1,346
축산업진흥	동물보호및복지	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	11,976
		반려동물산업육성	3,454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8,595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22,270
	반려동물인프라구축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3,050
	축사시설현대화(FTA)	축사시설현대화(용자)	106,761
		축사시설현대화	35,892
	축산기술보급	가축개량지원	51,054
		축산자조금	22,596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수급관리	89,360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6,630
		축산물수급관리(용자)	9,000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	800
		사료산업종합지원	101,400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말산업육성지원	15,543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용자)	250,000

사업유형(신)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6예산안 (백만원)
	친환경축산(축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용자)	734
		조사료생산기반확충	80,752
		가축분뇨처리지원(용자)	35,055
		가축분뇨처리지원	39,138
행정 및 청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기관운영비 지원	19,270
	농림행정정보화(정보화)	행정정보화(정보화)	3,972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정보화)	3,186
		차세대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정보화)	12,448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경비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3,006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입대체경비	450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정보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정보화)	534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	농식품통합정보체계구축(정보화)	3,875
	농업농촌알리기	농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4,461
		대한민국농업박람회	2,662
	농업정보환경지원(정보화)	농업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3,799
	농지관리정보화(정보화)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2,866
	정책연구개발(R&D)	정책연구개발사업	1,405
	행정지원	행정운영	200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정책협업 지원	916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04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운영	3,011
기타	제도운영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5,061